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인쇄/1998년 10월 24일

발행/1998년 10월 27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북한경제사회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6 팩시밀리 901-2544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44-3

6,500원

연구보고서 98-01

•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 병 로
김 성 철

민족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과정에서 개혁·개방의 확대에 의한 불평등의 심화는 주민들의 정치경제적 불만을 야기하였고 사회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되었는데,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는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1990년대 북한은 경제난으로 취약해진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동요계층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억압을 강화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적 차별구조를 심화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살펴보고, 불평등 구조속에서 북한주민들이 어떤 정치사회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어떤 형태의 행위로 표출될 것인가를 분석·전망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불평등 인식

맑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도입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상 존재한 사회주의 사회에는 비록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잉여가치의 착취에 따른 불평등의 재생산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불평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베버(Max Weber)는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적 계급 이외에 신분이나 인종, 성별, 종교 등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정당과 같은 권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콘라드(J.A. Konrad)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차이를 가져

오며, 분배, 교환 및 소비의 참여과정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렌스키(G. Lenski)는 사회주의 사회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실질적 감소를 가져왔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치적' 불평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했으며 노동의 불평등, 성별 불평등, 도농간 불평등 등 주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른바 '행정적 배분'에 의한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당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함으로써 불평등은 국가관료제와 정당에 의한 행정적 배분의 결과로 초래된다. 이런 점에서 질라스(Milovan Djilas)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착취계급으로 소련의 노멜클라투라와 같은 공산당 관료 중심의 지배적 특권층인 '신계급'(New Class)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권력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불평등 구조의 부분적 반영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정치사회적 태도는 구조화된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은 불평등 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처한 불평등한 사회적 상황을 다르게 인식한다. 기능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한 사회는 서로 다른 역할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됨으로써 체제가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서 보면 불평등한 계층체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갈등이론에 의하면 정치권력을 장악한 지배집단이 그들의 정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징을 조종하고 선전과 검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가치와 태도는 내면화되지 않고 갈등이 잠재된다.

불평등구조의 악화가 주민들의 급진적 태도를 형성하고 정치사회적 동원을 야기하여 체제를 변화시킨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구사회

주의권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공공기업의 사유화 등 개혁·개방의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구체제의 권력층과 관료들이 단기간에 부를 축적함으로써 신흥유산계층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개혁 과정에서 일부집단의 선도적 축재와 빈부격차의 발생 및 확대 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는 아직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를 정당화하는 이론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적 평등성'을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적 요소로 내걸고 있다.

계층간의 사회이동(social mobility)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은 사회적 상승이동을 위한 핵심적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불평등 구조는 정치엘리트층이 많은 특권을 누리며 상당한 부분을 다음 세대에 까지 물려줄 수 있는 폐쇄적 순환구조를 만든다. 계층간의 불평등은 역사·문화적으로 형성되며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이동에 대한 욕구는 사회화를 통해 습득되기 때문에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불평등 구조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배계층 지배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역사·사회·문화적 자원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정치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

북한사회는 공식적으로 맑스-레닌주의 계급노선에 의한 계급적 평등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한국전쟁을 통한 심대한 사회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전쟁에의 참여 및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주민성분을 분류하고 이를 차별화한 엄격한 정치적 위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결과 전사자·피살자가 전체인구의 약 25%를 차지함으로써

전통적 사회관계가 해체되고 성분에 의한 사회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계층구조는 항일혁명가 등 1~2%의 특수계층을 제외한 25~30%의 핵심계층은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 유가족들이 중심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복잡계층에 대해서는 혁명화대상, 적대계층 등으로 분류하여 사회적 차별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경직된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균중노선'을 채택하고 1960년대부터 정책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김정일은 '광폭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별적 성분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사회저변에서의 불평등 해소 및 주민들의 불평등 인식을 변화시키는데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듯 보인다.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한 계급정책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 사회집단으로서의 노동자의 지위가 높아졌고 계급간 소득격차가 감소되었으며 성별차이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1960년과 1993년을 비교할 때, 노동자는 41.3%에서 63.1%로 증가한 반면, 농민과 사무원은 44.4%에서 23.5%로, 13.7%에서 13.4%로 각각 감소하였다. 노동자의 증가는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농민들이 노동자로 진출함으로써 노동자층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주민을 노동계급화한다는 이념아래 농민, 지식인, 상업과 서비스 인구층도 모두 노동자계급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인민회의 등에 진출하는 비율이 64%로 크게 증가한 인텔리계급에 비하면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위축되고 있다.

정치권력의 위계구조가 경직화됨에 따라 부의 통제에 대한 불평등과 분배적 측면에서 소득과 지위의 불평등으로 연결되었다. 북한의 소득분포 자체는 남한의 소득분포에 비해 상대적인 평등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소득 수준에서 보면 북한근로자들의 연간수입은 840~

1,800 달러로 남한의 하위 10%의 소득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북한 고위층의 소득수준은 남한주민 50~60%의 소득수준에 해당한다. 물론 이들이 누리는 정치·사회·문화적 혜택을 고려하면 소득간 격차는 이보다 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분과 직위에 따라 주택분배, 식량배급, 문화생활 등 중요한 생활설비에 관련된 것들이 국가의 행정적 배분에 의해 할당되기 때문에 경제적 격차는 커진다.

북한의 소득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1980년대 중반 이래 추진한 개혁·개방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민소비품 생산, 티밭의 이용강화 및 직매점 개설, 암시장 형성 등으로 사적 소득원이 발생하여 불평등 요인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간부들이 암시장을 통한 개인장사 등으로 부를 축적하는 등 개혁·개방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한 새로운 계층도 형성되고 있다. 한편 최근 3~4년 동안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극빈계층 인구나 어린이 및 여성의 피해가 늘어나고 지역간 식량공급의 편차가 나타나는 등 계층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불평등도 증가하고 있다.

3. 불평등의 재생산 메카니즘과 지배구조

북한의 불평등의 구조속에서 사회적 상승이동이 가능한 주요 통로는 교육과 당이다. 정부기관 및 당 등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는 현 북한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입당하는 것은 간부, 전문인 등 상류층으로 진출하는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교육의 기회와 입당자격이 가족배경과 출신환경에 의해 제약받음으로써 불평등 구조는 재생산된다. 사회적 분업체계의 성격을 띤 북한의 불평등 구조는 오히려 교육제도와 당체제에 의해 제약되며 가족구조

에 의해 영속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엄청난 피해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전쟁의 사회적 결과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지도부는 불평등에 대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도기에는 도시와 농촌, 공업부문내 및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통해 계급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과도기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분배받는 것"을 사회주의 분배원칙으로 설정함으로써 계급간 및 계급내의 격차를 합리화한다. 즉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달성하려는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의 복잡성의 정도나 효율성, 그리고 성취된 과업의 양이나 질 등과 같은 기준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또 북한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실천하는 리더쉽을 갖춘 사람이면 사회적 상승이동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정당화 논리 전개와 설득을 통해 북한지도부는 주민들의 비판적인 정치사회적 태도 형성을 억제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 중국의 '선부론' 등과 같은 이론적 정당화의 시도는 전개되지 않고 있다. 대신 계급, 지역간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고 점점 평등성을 향해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불평등적 성격은 개혁·개방 및 경제성장의 결과가 가져오는 가시적인 소비패턴의 차이로 생겨나는 위화감이나 갈등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느끼는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은 베트남과 비슷하게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과 대비시켜 사회적 평등성을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적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4. 불평등 구조의 정치사회적 함의

사회적 불평등구조가 북한주민들의 정치사회적 인식 및 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자, 농민, 인테리 계급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규정하는 계급적 지위와 위상 때문에 사회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을 차별화할 수 있는 준거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선진된 계급의식을 가진 것으로 자부하는 동시에 생산현장에서 다른 사회계급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다. 농민은 노동계급화라는 목표에 의해 노동자에 비해 열등하다는 의식도 있지만 기본 생산계급으로서의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인테리는 비판적 성향 때문에 경제의 대상이 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소극적, 피동적인 존재 양식을 보인다.

반면 출신성분 등 정치적 위계구조하에서 가장 열등한 복잡군중과 최상층인 핵심군중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군중은 특수계층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으나 지위상승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한다. 복잡군중은 오랜 사회적 차별관행의 피해자로서 박탈감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식량난의 악화로 복잡군중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복잡군중 중에서도 적대계층에 속한 주민들 가운데는 사회적 상승이 철저히 차단됨은 물론 식량난으로 기본적인 생존이 위협받음으로써 보다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청년과 학생들은 학습생활과 조직생활에 묶여져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청년과 학생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처음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이어서 나름대로 심각

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군입대, 대학입학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불평등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다.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문제삼지는 않는 분위기다.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북한에서 아직은 정치의식을 지닌 계급집단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 이는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식량난에 대한 원인으로써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10.2%에 불과한데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계급의식을 지닌 집단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적 측면에서 북한당국의 사회통제와 긍정적 측면에서 각종 학습채널을 통한 체제평등성에 대한 합리화와 선전사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넓게 보면 북한은 한국전쟁의 역사적 경험과 분단구조라는 역사적,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정치사회적 비판의식을 억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정치사회적 비판의식은 사회상황 변화와 분단구조의 변화에 따라 저항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식량난의 원인을 국가정책 때문이라는 지도층의 관료주의적 실정 때문으로 생각하는 동요계층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정치사회적 비판의식을 억제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정치경제적 변화와 나진·선봉지역의 발전이 주민들간의 비교의식과 비판의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허쉬만의 분석처럼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된 적대계층은 북한 체제위기사 가장 잠재적인 체제 저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불평등 구조의 심화는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부터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현재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중국의 ‘선부론’과 같은 이론적 정당화는 시도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평등성 유지를 체제의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아직까지 불평등의 격차가 정치사회적 비판의식을 심각하게 야기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혁·개방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결과는 불가피하게 초래될 것이다.

최근 북한이 국내의 경제활동 공간에서 소유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기단계의 시장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변화가 불평등 구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개방정책으로 부를 창출하는 집단이 증가함과 동시에 개방지역과 북한내부의 비교개념이 확산되어 불평등 인식과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사상적 동요가 적지 않은 청년층과 소외된 적대계층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세력을 형성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선봉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목 차

I. 서 론	1
II. 사회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불평등 인식	6
1. 불평등의 원인과 양상	6
2. 불평등 인식과 정치사회적 태도	12
III.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	21
1. 정치적 위계구조와 불평등	21
2. 계급구조와 불평등	37
3. 사회적 관계와 불평등	59
IV. 불평등의 재생산 메카니즘과 지배구조	67
1. 사회이동과 불평등의 재생산 메카니즘	67
2. 불평등에 대한 북한 지배계층의 정당화	79
V. 불평등 구조의 정치사회적 함의	89
1. 주관적 불평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89
2. 정치사회적 함의	100
VI. 결 론	113
참고문헌	117

I. 서 론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형평성있는 이상사회를 회구한다. 더욱이 사회주의는 계급간 착취와 계층간 불평등을 불식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체제의 핵심적 모토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사회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고착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체제 건설기에 추구하였던 평등이념은 점차 약화되고 권력과 성분, 계급 및 이데올로기 등에 따른 위계질서와 차별화를 사회적으로 당연시하는 불평등 구조가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적 집단과 인구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이 증대되면 자원을 둘러싸고 사회의 단위집단들간에 경쟁이 증가하게 되어 이 경쟁이 사회내의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의 분화를 촉진시키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화는 개인과 집단의 활동과 특성의 차이를 특화·전문화시키는 한편, 개인과 집단간의 경쟁과 교환 및 분쟁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분화된 사회적 관계는 구조화되며 가장 넓은 범위에서 인간관계를 규정한다. 인간의 구조화된 행위 가운데 사회통제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형태가 바로 사회계층화 현상이다.

사회불평등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사하는 권리나 기회,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보상이나 특권에서 나타나는 차등화의 구조화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회의 부유층과 빈곤층 혹은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간의 격차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혁명 이전의 출신성분과 계급에 의해 다양한 차별이 자행됨은 물론 간부와 인민 사이에 신분적, 기능적 차별화가 발생

2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하며 도시와 농촌, 도시노동자와 농민간의 구조적 차별도 생겨난다. 한마디로 사회불평등은 권력, 부, 위신 등 정치·경제·사회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구성원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등으로 구분하고 전주민에 대한 성분조사를 실시하여 계급·성분별로 차별화하는 사회주의적 계급정책을 실시해 왔다.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소위 반당 반혁명분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주민을 차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계층구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득과 부에 의한 불평등 구조라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계급정책에 의해 생성된 측면이 더 강하다. 사회이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계층별, 지역별 불평등 현상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북한은 경제난으로 취약해진 '우리 식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동요계층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억압을 강화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적 차별구조를 심화시켰다. 1990년대 들어 지연되거나 불규칙해진 식량배급이 2년 동안 계속된 대홍수로 거의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계층 및 지역간 생활상의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정치사회적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사회혼란이나 폭동사태는 발견되지 않는다. 사회주의권 붕괴,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이 급격히 붕괴하거나 변화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확산되었으나, 성급한 예측과는 달리 북한체제는 정치적 불안정에 휩싸이지 않았다. 극도의 식량난과 경제불황으로 최하층민과 상층부간의 삶의 기회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김일성에 대한 숭배의식은 회교국가의 근본주의자들을 연상케 할 만큼 종교적인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망명 당시 "공화국이 경제적으로 좀 난관을 겪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잘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붕괴될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황장엽의 평가는 이런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는 그 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의 문제에 응축되어 있고 주민들의 문화·정서적 가치형성은 이 구조화된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볼 때, 사회불평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과정에서 개혁·개방의 확대에 의한 불평등의 심화는 주민들의 정치경제적 불만을 야기하였고 사회변화의 주요 동인이 되었던 바,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는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 스스로도 사회주의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다. 소유의 다양화 및 시장경제의 도입 등으로 사회주의적 경제관계가 변화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적으로 공산당의 지도를 확립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평등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를 ‘빈익빈 부익부’의 체제로 규정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한층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마지막 이념적 보루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평등’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평가하기 위해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살펴보고, 최근 경제침체 및 개혁·개방조치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불평등 구조속에서 주민들이 어떤 정치사회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어떤 형태의 행위로 표출될 것인

4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가를 분석·전망해 보고자 한다. 불평등 구조의 심화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및 사회통합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변화방향과 지속성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분석·예측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형성하는 원인과 양상에 대해 검토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불평등의 속성인 권력에 의한 계층화 현상을 근간으로 하여 그 위에 중첩적으로 형성되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의 중층구조를 설명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며 기득권층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정치사회적 태도 및 행위를 표출하는가를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권력, 소득, 사회관계 등 세가지 차원에서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분석한다. 첫째, 권력·성분 위주의 불평등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당국의 광폭정치로 성분별 불평등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등을 살펴본다. 둘째, 경제적 계급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으로 노동자와 농민, 육체노동자와 사무원·지식인 등 정신노동자간의 소득 및 배급격차에 의한 불평등의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최근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유념하여 분석한다. 셋째, 연령별·성별·지역별로 분화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불평등 구조속에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동 가능성 및 불평등 구조를 지속시키는 재생산 메카니즘에 관해 논의한다.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와 사회적 지위의 이동가능성은 사회통합의 열쇠라는 점에서 교육 및 당에 의한 신분상승 등 사회적 이동의 통로와 성격들을 분석하고, 불평등 재생산 메카니즘으로서 가족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구조에 대해 북한의 지배계층은 어떻게 정당

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제V장에서는 불평등 구조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계층별로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어떤 정치사회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억압통치, 경제난 악화 및 간부들의 부정부패 등 정치사회적 불만이 계층, 사회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이념적·물리적 통제 등 내부요인과 분단 구조 등의 외부요인이 어떤 역동적 관계속에서 정치사회적 행동표출을 억제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제VI장은 결론으로 불평등 구조가 산출해 내는 사회갈등적 요인과 사회통합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북한 불평등 구조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불평등 구조가 향후 북한체제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해본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분석자료와 국제구호기구의 북한관련 자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하며, 귀순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및 최근 실상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분석방법에 있어서 사회주의권 및 남한과의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북한의 구조적 변화를 전망한다.

II. 사회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불평등 인식

1. 불평등의 원인과 양상

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온 보편적인 현상으로 ‘계급없는 평등사회’를 부르짖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맑스주의자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양극화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도입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상 존재한 사회주의 사회에는 비록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잉여가치의 착취에 따른 불평등의 재생산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불평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원래 맑스(K. Marx)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모든 사회의 불평등 체계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원인인 생산영역에서 계급관계의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불평등 구조분석에 크게 기여하였다. 무엇이 인간사회의 불평등을 가져오며 어떤 양상을 띠는가에 대해 물질적 생산수단을 소유 혹은 통제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해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로 지배-피지배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베버(Max Weber)는 사회적 불평등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구조화되며 경제적 계급 뿐만 아니라 정당(parties)과 같은 권력이나 신분, 인종, 성별, 종교 등 사회적 지위(status)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베버에 의하면 한 사회의 불평등이 지속되는 주요 기제는 경제구

조나 경제적 자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치구조 혹은 국가가 향유하는 권력과 물리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철폐된 이후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은 존재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또한 모든 국민이 생산수단에 대한 동등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성격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생산 및 소비수단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콘라드(J.A. Konrad)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차이를 가져오며, 분배, 교환 및 소비의 참여에서도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¹⁾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 사회에는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사회집단의 생활수단을 배분하는 정치적 명령권을 갖는 계층이 존재함으로써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렌스키(G. Lenski)는 사회주의 사회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실질적 감소를 가져왔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치적' 불평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했으며 노동의 불평등, 성별 불평등, 도농간 불평등 등 주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²⁾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소위 '민주적 중앙집중제'를 실시함으로써 최상층이 권력을 독점하였고 최하층에서 정치범을 양산시켰으며 일반대중은 정책수립과정에 거의 소외되어 있다. 작업장에서도 경직된 권위구조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의 불만은 폴란드 및 구소련에서 보았듯이 폭동으로 치달을 정도로 팽배해졌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사회주의 사회의 불평등이 이른바

1) 안병영,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평등'문제," 「연세행정논총」(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 9집(1982), p. 21.

2) G. Lenski, "Marxist Experiment in Destratification: An Appraisal," *Social Forces*, Vol. 57 (Dec. 1978); 송복 편저, 「사회불평등갈등론」(서울: 전예원, 1986), p. 252.

‘행정적 배분’에 의한 불평등이다.³⁾ 행정적 배분에 의한 불평등은 특히 국가관료제와 정당에 의해 주로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당이 모든 의사결정과정을 독점하며 국가권력의 상징인 당 이외의 어떤 제도적 기관도 자율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 권력을 점유하고 있는 당료는 자신들의 목적과 원리에 상응하는 관료들에 대한 보상과 특권을 허용한다. 관료는 국가권력의 분신으로 분배를 집행하며 고급시설, 외국여행의 기회, 공공승용차나 국가재산의 이용, 필수용품 획득 등 상당한 수준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 당원증을 소유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지식인계층은 체제정당화의 첨병역할을 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는다.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보상분배는 결국 자본주의적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라는 매우 뚜렷한 보이는 손에 의해서 지배되며 불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 첨예화되기 쉽다.⁵⁾

사회주의 사회에서 지배계층은 국가와 당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층 공고화된다. 질라스(Milovan Djilas)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착취계급으로 공산당 관료 중심의 지배적 특권층인 ‘신계급’(New Class)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⁶⁾ 질라스는 이 신계급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독점 때문에 특권과 경제적 우위를 지닌 사람들”⁷⁾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들은 단순히 당원인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있는

3)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주민의 가치체계」(1993.12), pp. 27~35.

4) Frank Parkin,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Social Stratification in Capitalist and Communist Societie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5); 길태근·김원동 공역, 「계급불평등과 정치질서」(서울: 나남출판, 1988), p. 185.

5)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주민의 가치체계」, p. 32.

6) Milovan Djilas, *The New Clas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2).

7) *ibid.*, p. 39.

사람들이 아니라 체제의 주요 수혜자인 전업적인 정치가나 당관료들을 가리킨다. 이 신계급은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가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사람과 재화 및 용역을 배분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미에서 재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계급과 동일한 착취계급적 지위를 갖는다. 보스렌스키(Michael Voslensky)는 소련사회에서의 이러한 신계급을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로 지칭한다. 노멘클라투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업적 경력이 아니라 정치적 경력이며, 이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지배계급을 형성한다.

결국 불평등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 의해서 형성된다. 정치적 위계구조에 따른 불평등 구조, 경제적 계급과 관련된 불평등, 그리고 성·연령·지역 등 사회적 변수와 관련된 불평등이 그것이다. 물론 정치와 경제, 사회 영역에서 형성된 불평등은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서로 긴밀한 연결망으로 결합된 중층구조적 양상을 띤다.

사회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보든 국가 자본주의로 보든, 아니면 국가 사회주의로 규정하든 사회주의 사회는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지배계층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되는 불평등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사회에서 제반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과정이나 제도 및 절차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전체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공산당이 사회내부의 모든 의사소통의 통로를 독점하고 있으며 하위집단의 불만이 표현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차단된다. 관료주의의 발달과 당과 국가기구의 독점적 지배를 강화하는 규범적 합의에 의해 정치적 순종이 조장된다. 그 결과 국가관료는 생산과 자원분배와 관련된 계획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의료 및 교육사업, 주택 소비재설비 등 물질적 생활수

준에 있어서 혜택을 받게된다.⁸⁾

정치적 이데올로기 보다 국가의 물질적 토대를 강조하는 국가자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주의 체제의 특권 지배계층은 자본주의 체제의 자본가와 다를 바 없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인 국가가 이윤을 위해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것이다.⁹⁾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에 생산과정의 성격에 차이가 없으며 단지 소유기능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이 아닌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로의 편입이 심화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 보인다.

사회주의를 국가 자본주의로 보지 않고 국가 사회주의로 보는 입장에서 사회주의 불평등은 당과 관료계층에 의해 강화된다. 국가 사회주의적 입장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체제가 생산과정상, 특히 소유와 통제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소유권과 통제권이 국가로 이양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국가의 운신의 폭은 자본주의적 기업가보다는 훨씬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착취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국가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국가는 중앙계획 및 통제와 조정의 기능을 통해 노동자인 일반사람들을 관리·통제한다. 이러한 계획과 통제는 구체적으로 당엘리트와 관련 행정부처에 의해 결정된다. 계획과 통제는 사람들의 기능에 따른 사회관계의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권력이나 특권, 그리고 위신상의 각종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에 따라 각 계급간의 소득불평등이 나타난다.

8) Howard Davis and Richard Scase, *Western Capitalism and State Socialism: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Ltd., 1985),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구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서울: 느티나무, 1991), pp. 45~46.

9)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p. 47.

각 계급·계층은 국가로부터 자율성이나 권한이 제한되며 정치적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이 누리는 특권이나 특별수입은 정치적인 신임의 지속여부에 좌우되는 것이지 개인의 힘이나 기업의 경제적 역량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기술이나 자격 및 기능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분배를 결정하는 중앙계획과정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의 편차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적게 나타난다. 또한 비육체노동을 하는 화이트칼라 계층의 상대적 소득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보다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¹⁰⁾ 사회주의 사회에서 수입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 구조는 서구사회에서 만큼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은 권력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불평등 구조의 부분적 반영에 불과하다. 그러나 권력이나 경제적 기능 및 지위의 차이에 따른 소득이나 재화의 불균등분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권력관계와 정치적 활동이 불평등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계구조는 경제 및 사회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국가를 형성하는 정치구조는 인간행동을 강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님과 동시에 경제영역에서도 정부의 소유권 등을 통해 물질적 자원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결정짓는 궁극적인 요인은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형성하는 매개체는 권력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경제적 계급일 수도 있으며 연령·성·지역 등 사회적 변수일 수도 있다.¹¹⁾

사회주의에서 노동력의 충원 및 배치는 산업 및 도시의 발전과 더

10)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p. 136.

11) 에드워드 G. 그랩, 양춘 역, 『사회불평등: 이론과 전망』 (서울: 나남출판, 1994), p. 280.

불이 다양한 형태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불평등성은 간부와 인민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산업과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주의 체제 자체에 의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구조적 불평등이다. 특히 생산재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경제적으로 따라잡으려는 시도는 농촌경제보다는 도시경제를, 농민보다는 노동자를 직·간접으로 우대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국가기업 노동자와 국영농장 농민이 생산·소비상의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는 차별적인 보호책임을 진다. 대다수 농민들은 거주·직업 이동에 대한 경직된 통제로 인해 열악한 농촌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다. 북한의 경우에도 '농민의 노동계급화'라는 목표아래 농촌기계화를 추진하고 농촌경제를 도시경제와 긴밀히 통합시키는 노력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는 없는 듯 보인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종종 불평등의 심화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침체에 직면하여 점진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거나 탈사회주의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체제의 기득권 세력이 경제개혁·개방의 제도적 혜택을 독점함으로써 불평등 구조가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개혁·개방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불평등화 현상의 정치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개혁·개방의 속도와 정치변화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기도 한다.

2. 불평등 인식과 정치사회적 태도

불평등 구조를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계

급의식(class consciousness)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즉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보다 불평등의 사회적 관계가 초래하는 정치사회적 결과 및 사회적 갈등에 관심을 갖는다. 계급의식은 사회전체의 불평등 구조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분석적 개념으로서의 계층 혹은 계급과 실재적 집단으로서의 계층·계급을 구분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계층 혹은 계급은 유사한 경제적 혹은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범주로 간주한다. 이런 의미로는 계층이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계층은 수입과 같은 여러 기준에 입각하여 위계지워진 사람들의 통계적 집합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불평등의 인식과 정치사회적 태도 혹은 집단행동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통된 성원의식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물적토대를 갖춘 실재적 집단(groups)으로 발전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불평등 구조속의 각 사회집단이 지배계층의 통치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자신들이 처한 불평등한 사회적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지배(domination)의 개념과 직결된다. 기든스(A. Giddens)는 지배를 구조화된 권력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역동적 성격을 설명한다. 즉 기든스는 권력을 “행위자들이 지배의 구조적 속성들을 이끌어내고 재생산하는 행위자들간의 자율과 의존의 관계”라고 정의하며, 지배는 “권력의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립되고 일상화하며 재생산될 때 일어나는 행위자들간의 규칙적인 유형들 혹은 구조화한 관계들”¹²⁾이라고 규정한다. 권력은 사회

12) Giddens,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Vol. 2,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적 불평등을 낳는 요인 가운데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불평등 구조화의 중심적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또한 권력의 정당화 즉, 지배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불평등 구조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며 그에 따른 태도 및 행동을 유발한다.

정태적이고 분석적인 불평등 구조의 개념은 권력과 지배를 중심으로 보면 동태적 개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불평등 구조의 성격을 권력관계의 지배적 구조로 파악하면, 사회불평등 구조는 더 이상 정태적이고 통합적인 사회계층이 아니라 사회집단간의 동태적이고 갈등적인 역학관계로 발전한다. 지배는 일차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에 기반을 갖고 있지만 단순한 강제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당성(legitimacy)과 내적 정당화(inner justification)에 근거한다.¹³⁾ 불평등 구조하에서 지배권력은 헤게모니를 통해 지배관계를 정당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지배권력은 지배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적,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자원 등 각종 자원을 독점 또는 통제한다. 따라서 지배계층의 통제능력은 지배계층이 차지하는 각종 자원의 통제능력에 달려있으며 이를 결여한 지배계층은 불안정하다.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한 계층체계는 개인들을 보다 높은 지위와 역할에 접근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가장 능력있고 자격있는 성원들을 충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정당한 것이다. 즉 중요한 지위들을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에 부응하며 그러한 지위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욕구에 기여한다는 점에

California Press, 1985, p. 7. 양춘 역, 「사회불평등: 이론과 전망」, p. 259에서 재인용.

13) Gerth and Mills, trans. and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London and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74, p. 79.

서 기능적이라고 말한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사회성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규범들의 체계적 유형을 제공하여 하나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정당화된다.

파슨즈(T. Parsons)는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의 두가지 측면에서 지배의 정당화 혹은 내면화가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긍정적 차원의 내면화는 사회성원으로서 개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가치, 신념, 언어, 상징과 같은 문화적 유형들을 자신의 신념체계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부정적 차원의 내면화란 여러가지 상벌제도와 통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¹⁴⁾ 이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체계 속에서 자발적인 동의든 비자발적 순응이든 간에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¹⁵⁾

반면 갈등이론(conflict theory)에 의하면 사회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이 대립·갈등하는 관계로 구조화된다. 따라서 정치사회화를 통한 정당화의 시도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지배집단이 그들의 정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상징을 조종하고 선전과 검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치적 가치와 태도는 내면화되지 않고 갈등이 잠재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항상 체제로부터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는데 사회화는 손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

14)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New York: The Free Press, 1951). 이스튼(D. Easton)과 데니스(J. Dennis)의 체계존속이론(system persistence theory)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즉 체제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내면화와 강압적 사회통제가 각각 어느 정도일 때 체제가 적절히 유지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15) Peter L. Berger, *Invitation to Sociology*, 환완상 역, 「사회학에의 초대」(서울: 현대지성사, 1977), 제4장; Robert E. Lane, *Political Ideology* (New York: Free Press, 1962), 제17장 참조.

이고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득권자들의 음모일 따름이다. 지배집단은 추종집단으로 하여금 통제관계를 유지하는 사회가치를 수용하게 하는데 사회화를 이용한다.¹⁶⁾

갈등이론이 지적하는 정치사회화를 통한 내면화의 문제점은 주로 자본주의 사회를 염두에 두고 분석한 것이지만 사회주의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맑스 등의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 구조는 자본주의적 착취구조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이며 불평등의 통합적 기능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의식에 불과하다. 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지며, 지배계급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 특히 피지배계급에 명백히 상치되는 자신의 계급적 지배를 정치사회적으로 정당화한다. 이 지배계급은 국가를 통해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즉 허위의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평등한 계급구조는 통합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한다.

밀리반드(R. Miliband)가 정치사회화에 대해 “자본주의의 사회적 질서와 제반가치를 강화하는 대중의 교화과정”이라고 주장한 비판적 시각을 사회주의 사회에 연장시켜 적용해 본다면 사회주의 정치사회화 역시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이 사회주의의 사회적 질서와 제반가치를 대중에게 교화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사회주의 체제는 전체주의적 억압과 통제로 정치사회화를

16)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사회화를 통한 정당화는 지배계급이 상징적 작이나 선전 및 검열제도 등을 통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피지배계급에게 주입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 정치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대개 보수 정당, 교회, 기업, 매스미디어, 교육기관 등으로 지배계급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R. Miliband,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69); 김경웅, 「정치교육론」(서울: 유평출판사, 1982).

강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제의 공식이데올로기인 맑스-레닌주의를 표면적으로 신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헤게모니적 관점에서 보면 현상은 좀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정당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배집단은 강제력과 자발적 동의를 적절히 활용하기 때문이다.¹⁷⁾ 지배집단은 언제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조직화된 동의 역시 필요로 한다. 즉 자연발생적인 합의로서의 동의를 창출하기 보다는 강제력에 의해 조직화된 승인 내지 묵인을 유도해 낸다. 따라서 강제력에 의해 조직화된 동의를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확산시키고 특정 생활양식을 갖도록 교육시킨다. 그람시는 이를 헤게모니 이론으로 이를 설명한다. 즉 불평등 구조가 강제력, 즉 권력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공간을 활용하여 자발적 동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인식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는 당연한 것이며 나아가 자신의 이익이 지배관계속에 실현되고 있다고 믿게 된다.

결국 불평등 구조를 인식하는 사회구성원의 의식, 특히 피지배집단의 정치사회적 태도는 크게 이분화해볼 수 있다. 하나는 피지배집단이 자신들의 불평등과 낮은 지위의 현실에 대해 적응하고 내면화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인정하는 것이다. 피지배계층 성원들이 불평등 구조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제유지적인 공동체 의식에 적응적 태도로 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불평등 구조에 대해 저항하는 급진적 태도를 표출하는 것이다.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처벌이 극단적으로 행해지는 북한에서 급진적 태도가

17) 최장집,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국가이론과 분단한국』 (서울: 한울, 1990), pp. 40~41.

표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처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급진적 태도의 잠재적 성격을 말해준다. 따라서 정치적 반대세력의 의식내용, 주민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적 행위 등은 급진적 태도의 단서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불평등구조의 악화가 주민들의 급진적 태도를 형성하고 정치사회적 동원을 야기하여 체제를 변화시킨 최근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구사회주의권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공공기업의 사유화 등 개혁·개방의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구체제의 권력층과 관료들이 단기간에 부를 축적함으로써 신흥유산계층으로 부상하였다.¹⁸⁾ 구소련사회의 장관, 공산당수뇌부, 대학의 고위관리자, 국영기업체의 장, 정부기관의 관료 등은 기업의 설립,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의 변화, 은행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권력을 활용하여 부를 축적한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면서 중간층이 해체되고 계층구조가 양극화됨으로써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¹⁹⁾ 특히 경제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화조치는 계층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이념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등소평의 '선부론'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개혁과정에서 일부집단의 선도적 축재와 빈부격차의 발생 및 확대 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기의 불평등 심화가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과 인민 모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논리

18) 조한범, "러시아 사회의 계급구조와 부유층의 형성,"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p. 87-96.

19) 김두섭,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사회계층구조의 변화,"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p. 123.

이다. 이러한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권력층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로 부를 축적하는 신흥부유층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빈부격차의 발생을 통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기 보다 아직까지는 개혁기의 빈부격차가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의 대가로서 불가피하다는 지도층의 정당화논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⁰⁾

이와 같은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개혁·개방을 추진중인 베트남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과 달리 베트남 지도부는 개혁·개방시기에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 심화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베트남은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가 ‘평등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주의 정체성이 희박해져가는 시기에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²¹⁾ 자본주의를 ‘빈익빈, 부익부’의 체제로 규정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 지도부의 이러한 주장은 아직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도가 중국과 비교할 때 불평등을 심화시킬만큼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혁·개방의 속도와 범위가 베트남에도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개혁·개방에 따른 불평등 구조의 악화와 사회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베트남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계층간의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이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상향이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사람들은 불평등 구조를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은 사회적 상승이동을 위한 핵심적 기제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교육이나

20) 장경섭, “중국농촌의 불평등화와 선부계급,”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p. 44.

21) 김병로, “통일이후 베트남의 사회적 갈등과 통합,” 「통일된 베트남을 가다」 (서울: 남북나눔운동, 1997), p. 83.

전문적 경력 및 개인적인 부의 축적 등을 통한 계층 상승의 경로는 사회주의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치적 신임을 통해서만 계층상승의 길이 보장된다.

사회적 이동은 세대내 이동과 세대간 이동으로 구분되는데 세대내 및 세대간 사회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구성원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불평등의 지배구조를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치엘리트층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상당한 부분을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직업적 및 사회적 위계구조의 정상은 사실상 전체 노동인구의 2~3%에 불과한 극소수의 정치엘리트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공산당 상층부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일치한다.²²⁾ 국가나 계획기구의 핵심적 간부진을 구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와는 달리 상속의 어떤 법적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립적 혹은 독립적인 사회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반드시 사회적 이동이 개방되어 있어야만 정치사회적 불만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의 카스트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계층간의 불평등은 역사·문화적으로 형성되며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이동에 대한 욕구는 사회화를 통해 습득되기 때문에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불평등 구조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만일 계층간의 불평등 구조를 어느 정도 형평성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지배적 가치라면 유사한 계층내의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 박탈감과 정치사회적 불만을 야기하는데 오히려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배계층 지배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역사·사회·문화적 자원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정치사회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2) 한상진 역, 「체제비교의 사회학」, p. 140.

Ⅲ.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

1. 정치적 위계구조와 불평등

가. 정치적 위계구조의 형성

사회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특징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치권력에 의한 위계구조가 불평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혁명 이후 국가건설과정에서 엄격한 계급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혁명과정과 국가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력들에게 사회적 혜택을 배분하는 정책을 견지한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과정에 참여하여 구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노동자와 군인, 지식인, 농민 등 다양한 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특히 혁명의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특혜가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지주와 자본가 등 구자본주의 체제의 특권계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반동분자로 간주되어 사회적 차별이 가해지며 노동자와 농민, 군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다. 사회주의 혁명이념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확고히 견지하며 노동계급의 입장을 강화한다. 또한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반동세력을 진압함으로써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념적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소위 당성·혁명성·계급성 등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계급을 분류, 지속적인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통치전략을 시도한다.

북한은 해방직후인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

하기 위해 반제·반봉건 민주혁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자를 핵심으로 농민, 애국적 지식인, 양심적 민족자본가들이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세력을 조직화하였다. 사회주의 계급노선에 의해 계급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계급정책을 “노동계급의 당이 계급노선에 기초하여 여러 계급과 계층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책”라고 정의한다.²³⁾ 김일성은 “사람들을 언제나 계급적 견지에서 평가하며 당의 계급노선에 철저히 서서 원수와 우리편을 엄격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²⁴⁾라며 계급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북한은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적 주력으로 규정하고 농민이나 인텔리, 중산계층을 혁명에 끌어 들여 이끌고 나가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계급노선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질적인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급성 이외에 전쟁의 피해상황을 기준으로 한 성분구분이 첨가된 것이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인명의 대량손실로 가족구조와 사회구조가 파괴됨으로써 사회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국전쟁은 북한에 엄청난 인적 손실을 가져오면서 북한의 가족구조와 사회구조에 지각변동을 초래했다. 「통일조선신문」은 한국전쟁으로 북한의 인명피해가 14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한다.²⁵⁾ 사망자가 민간인 40만6천명, 군인 29만4천명이었고, 실종자는 월남자를 포함하여 민간인 68만명으로 총 138만명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민간인 부상자가 매

2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1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p. 779~780.

24)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166.

25) *Toitsu Chosen Shimbun*, June 27, 1970; Young Whan Kihl,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p. 42에서 재인용.

우 많았다는 점이다. 부상군인 22만6천명 이외에 민간인 159만4천명이 부상당함으로써 182만명의 부상자가 생겨났다.

북한의 인적 피해를 이보다 더 크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정부의 자료는 북한군의 사망을 52만명, 부상자를 40만6천명으로 평가하여 전쟁으로 인한 북한군의 인적 피해는 93만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⁶⁾ 또 중국인민군을 포함한 공산측의 병력손실은 150만~200만명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⁷⁾ 한국전쟁에 관한 권위있는 학자인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와 존 헬러데이(Jon Halliday)는 전쟁으로 민간인 200만, 군인 50만 등 최소한 250만명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다.²⁸⁾ 이는 당시 북한인구의 25~26%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한 인수도 약 65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²⁹⁾되며, 전후 전쟁미망인의 수가 40만명에 달했다고³⁰⁾ 밝혀지는 등 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인적손실은 막대하였다.

북한 공식인구 자료는 1949년과 1953년 사이에 약 113만 가량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것은 1949년 북한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³¹⁾ 그러나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실제 인

26) 유완식·김태서, 「북한30년사」 (서울: 현대경제일보사, 1975), pp. 137~138.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p. 168.

28) Jon Halliday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p. 202. 한국전쟁으로 북한의 주요 5대도시가 전소되었으며, 그 중 원산의 피해는 남한군대에서 '원산폭격'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날 정도로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29) 전광희, "한국전쟁과 남북한 인구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pp. 60~92.

30) Hyo-Jae Lee, "National Division and Family Problems," *Korea Journal*, Vol. 25, No. 8(1985), pp. 4~18.

31)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 (Washington, D. C.: U. S. Bureau of the Census, 1990), p. 52.

적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규모가 적은 쪽으로 계산 하더라도 전쟁사망자 수는 최소한 북한 전체인구의 15%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부상자 182만(전체인구의 19%)을 포함하면 북한 인구의 33% 이상이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으며 적어도 북한가구의 절반 이상은 결손가족이 되었다는 설명이 된다.

전쟁의 피해자가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전사자·피살자 가족을 사회의 핵심세력으로 등용시키면서 계층구조를 재정비하였다.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 각 도별로 혁명유자녀학원을 설립하고 이들을 사회주의제도에 흡수하였다.³²⁾ 그 결과 북한은 인민의 25~30%를 차지하는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세력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가족관계의 해체와 결손가족의 증가는 국가에 의한 책임의 증대로 이어졌고 ‘전주민의 노동자화’라는 이데올로기적 언술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회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북한 계급노선의 질적인 변화는 한국전쟁의 막대한 피해라는 역사적 경험과 사회구조의 성격변화를 반영하는 정치적 위계구조를 형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혁명의 중심세력을 노동자·농민·인테리 등 계급적 특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과 관련한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핵심세력을 평가하는 성분이라는 자원을 정치적 위계질서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32) 원래 만경대혁명학원은 군사간부 양성기관으로, 해주혁명학원과 남포혁명학원은 당정치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김일성은 유자녀들을 직업적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 혁명학원은 물론 이들을 위한 대학교육기관의 설립을 지시하였고 중앙당 차원에서 뿐 아니라 도당조직부에도 유자녀 과를 신설하여 이들을 직업혁명가로 양성하도록 조치하였다. 김일성, “혁명가 유자녀들을 직업적 혁명가로 키우자,” 「김일성저작집」 제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393~407.

북한의 정치적 위계구조의 성격은 소련 보다는 중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혁명의 과정과 혁명에 참여한 핵심세력에서 중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소련은 노동자와 지식인들로 구성된 전문적인 혁명가 조직인 공산당을 만들어 정치기구를 장악함으로써 정권을 획득하였고, 중국의 경우에는 국민당 세력과의 오랜 무장투쟁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즉 소련혁명만 전문적인 정치인들이 주도한 정치혁명이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혁명의 성격을 띠었지만, 중국의 경우는 오랜 내전을 통한 군사혁명으로 전개된 결과³³⁾ 내전에 참가한 군인들과 피해자들을 반영하는 계급노선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치적 위계구조의 특성은 중국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1958년 8월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완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목표로 그 해 12월부터 전체주민을 출신성분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는 전 주민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소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북한이 시도한 사회주의적 계급정책이었다.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전쟁가담 정도와 성격, 피해자, 월남자 등 구체적인 성분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핵심군중으로 기존의 혁명가 가족 이외에 전사자·피살자 가족이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주민들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성분의 중요성은 한층 강조되었다. 성분이란 “사회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구분, 곧 사람들의 사상상 구성성분으로서 어떤 계급의 사상상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떤 계급의 사상이 그의 머리속을

33) Irving Horowitz, *Foundations of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p.205~230.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출신과 직업, 사회생활의 경위에 의하여 사회성원을 사회적 부류로 나눈 것³⁴⁾이라고 정의한다. 북한은 사람들의 성분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데 따라 변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성분은 출신과 성장배경, 경력 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사상과 동향을 분류해 놓은 사회적 신분(status)으로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불평등구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혁명초기에 추구하였던 엄격한 평등이념이 점차 완화·변질되고 해방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민성분을 크게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출신성분은 ‘태어날 때 가정이 처한 사회계급적 관계에 따라서 구분되는 성분’³⁵⁾ 즉, 본인이 출생할 당시 부모의 성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신성분을 규정할 때는 과거의 성분이 주로 거론되는데, ‘혁명가’, ‘노동자’, ‘고농’, ‘빈농’, ‘중농’, ‘사무원’, ‘학생’, ‘부농’, ‘지주’ 등의 신분이 사용되며, 이 중 어느 한 성분이 부모의 성분으로서 본인의 출신성분을 규정하게 된다. 한편 사회성분이란 “본인이 직접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업 및 사회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성분”³⁶⁾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인’, ‘노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 등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신분구분을 가리킨다.³⁷⁾

출신성분 구분작업으로는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한 ‘중

34)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제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762.

35)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제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597.

36)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제1권, p. 1646.

37) 현성일, “북한 인사제도 연구,” (미발표 논문), p. 6.

양당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소위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그리고 1980년 4월~10월에 걸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1981년 1월~4월에 걸친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³⁸⁾ 특히 1980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실시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에서는 13개의 부류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김정일이 통치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분완화정책의 시달에 따라 당시의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부류를 폐지 내지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불평등구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분별 계층구조이다. 성분정책에 근거하여 북한의 주민은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 등 3계층으로 구분된다. 일제시대와 해방후, 한국전쟁기, 현재 등의 시기에 정치사회적 지위와 역할, 정치적 동향과 반동단체 가담여부, 출신 및 사회성분을 종합평가하여 핵심집단인 핵심군중, 중간계층은 기본군중, 반동계층인 복잡군중 등 세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귀순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주민을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으로 이분하고 핵심군중을 기본군중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³⁹⁾ 이러한 정책은 북한이 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주민들을 기본군

38) 통일원, 『'95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5), p. 275.

39) 귀순자 김정민과의 인터뷰(98.3.4) 및 현성일 "북한의 인사제도 연구," (비발표 논문), pp. 3~4.

중과 복잡군중으로 구분하고, 기본군중은 다시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으로, 복잡군중은 계급적 토대, 한국전쟁관계, 전직관계, 사회도덕면 등으로 다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처리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였다.⁴⁰⁾ 공식적 구분이 어쨌든 간에 정치적 위계구조상 항일혁명열사는 최상 류층을 형성하고 핵심군중은 상류층, 기본군중은 중류층, 복잡군중은 하류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귀순자 이순옥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분기별로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이 성분심사를 하고 있으며, 성분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다. 북한의 모든 인사관련 및 개인자료 명세와 문건들에는 성분란에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환경 평가를 실시하는데 본인과 본인의 부모 및 친인척들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당원, 노동자, 사무원, 전사자가족, 영예군인 등은 그 기준에 따라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혁명인테리는 기본군중 또는 복잡군중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노동자·영예군인 가운데 핵심군중으로 간주되는 사람들도 있고 노동자·사무원 가운데 복잡군중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의하는 성분별 계층은 각 성분의 중심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정치적 위계구조의 구성

상류층을 대변하는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통치계급으로서 북한사회의 핵심부류에 속하는 계층이다. 핵심군중은 김정일의 가계와 친인척, 혁명가 가족 등 특수계층과 전사자·피살자 가족

40) 북한연구소, “북한의 계급정책,”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1」, (서울: 한울, 1987), p. 331~333.

등 일반 핵심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계층은 (1) 김부자의 가족과 친척, '접견자', 연고자, 및 정무원관리, 장성급 군장교, 조총련간부, 당·행정·군간부 가족 등 소위 북한의 최상층 간부와 (2) 항일빨치산 참가자(항일투사)와 그 가족 및 해방전후 김일성빨치산이나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했다 사망한 소위 혁명가 유가족, 그리고 남파간첩 등 대남공작원들과 '남조선혁명가' 유가족 및 자녀들을 포함한다. 한편 일반핵심계층은 한국전쟁 당시 피살자, 학살자 및 전사자 가족이 중심을 이루며 고농(머슴), 영예군인, 비서국비준 순국가족 등의 일부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경력에 크게 관계 없이 대학입학과 직장배치, 간부등용과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권과 국가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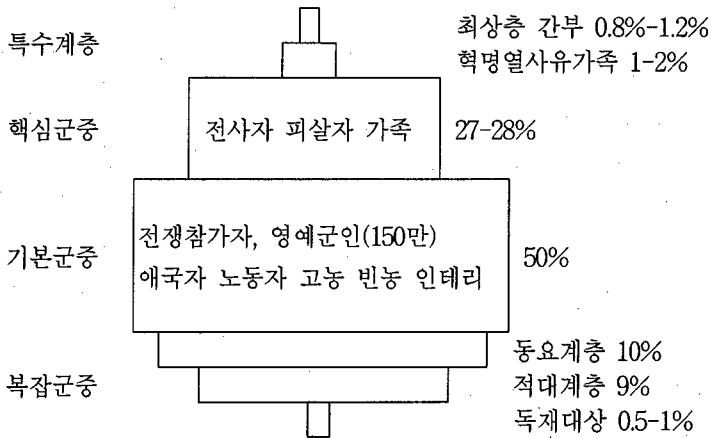
현재 북한을 지배하는 당·군조직의 주요 간부, 각 기업소 지배인, 지방 고급공무원 등 최상층 간부는 약 1만~2만여명으로 추산되며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4만~8만명, 방계가족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2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⁴¹⁾ 즉 북한의 최상층 간부군을 형성하는 특수계층은 전체인구의 약 1%(0.8%~1.2%)⁴²⁾ 정도로 추산되며 북한의 기득권내 핵심층이라 할 수 있다. 혁명열사유가족과 애국열사유가족은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한다.⁴³⁾ 나머지 28-29%의 중하급 간부들은 일반 핵심계층을 구성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인 특수계층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핵심군중은 전체주민의 약 30%를 차지한다.

41) 1993년 현재 13,000여명의 당·정·군, 각급 기업소 및 사회단체의 주요인사 명단이 파악되고 있는 바, 최고위층은 1~2만명선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42) 귀순자 김정민씨와의 인터뷰(1998.3.4).

43) 귀순자 이순옥씨의 증언(1996.12).

<그림 1> 북한의 성분별 계층구조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가는 지배계급임과 동시에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군중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원이다. 북한에서 당원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15%, 성인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약 300만명(80년 322만명)으로 발표되고 있다. 특수계층과 핵심군중은 당을 통해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배분을 통해 각종 사회적 혜택을 부여받는다. 핵심군중은 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적 배분의 담당자가 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물질적 자원의 사용과 문화적 자원에의 접근을 확보한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교육과 기술·행정적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기술자·전문가로 구성된 행정관료가 점차 권력과 부를 축적하게 된다. 불평등 구조는 결국 정치적 자원의 확보에 의해 결정되며 정치권력에 의해

위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의 위계를 정치적 계층화라고 부를 수 있다.

중류층인 기본군중은 특수계층에 속하지 않는 일반노동자, 농민, 사무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기본군중을 '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군중'이라고 규정하고 노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기본군중으로 포함한다.⁴⁴⁾ 그러나 북한이 기본계급이라고 할 때는 혁명의 주력군을 이루는 세력, 즉 노동계급과 농민을 가리킨다.⁴⁵⁾ 기본군중은 구체적으로 (1) 해방전 지주와 자본가로부터 착취를 당했던 애국자와 노동자, 고농 및 빈농, (2) 한국전쟁 참가자와 영예군인, (3) 해방후 북한체제 발전에 적극 협력한 인테리와 열성분자 등이 기본군중에 포함된다. 이들은 노동자, 농민, 사무원, 군인 등 해방전후, 전쟁기, 현재까지 직계, 외가, 처가에 정치적 하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가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로써 당중앙위 비서국비준간부 이하와 그 가족들이다. 대부분 각종 하급 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평범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 간다. 이 중에서 일부는 핵심계층으로 상승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군중은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준비과정을 거쳐 핵심간부로 등용되는가 하면 일부는 복잡군중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하류층인 복잡군중은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다. 복잡군중은 (1) 해방전 지주, 자본가, 친일파, 한국전당시 북한을 반대한 세력, 친남한세력, 월남자가족, 반당 종파분자(김일성·김정일부자와 노동당을 비난하거나 반대한 가

44) 과학·력사사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평양: 과학·력사사전출판사, 1982), p. 119.

45) 위의 책, p. 118.

족), (2)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도전한 가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저촉되어 문제시된 가족, 북한체제를 비방한 자의 가족, 남한방송 청취자 가족, 남한을 숭배하는 가족, 종교인가족, 악질 고리대금업자, 당 정책을 반대한 자, (3) 반당종파분자의 동조자(피동자), 병역기피자, 한국전 당시 치안대 가담자, 월남기도자, 국가 및 군사비밀 누설자, 출당·철직 및 추방자(면책 및 면직), 사회경제범출소자, 타락·방탕한 자 등이거나 이들의 영향을 받는 직계가족으로 분류된다.

복잡군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진학이나 입당, 군장교 등 국가권력에서의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복잡군중은 동요계급과 적대계급으로 구분하여 혁명화나 교양 혹은 고립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혁명화 대상은 계급적 토대나 사회·정치생활경위, 가정주위 환경이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 자신들의 사회적 처지나 지식으로부터 언제든지 북한체제에 대한 신념을 버리고 남한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써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에서의 진출이 박탈되지만 행정, 경제, 사회부문의 일정한 직위까지는 진출한다.

적대계급은 출신과 가정환경, 개인경력상 북한체제하에서 용납할 수 없는 계급으로 친일파와 지주, 부농, 매판자본가, 한국전 당시 남한측 가담자, 북한체제에 도전한 자, 월남자가족과 탈북자, 귀순자 가족,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전과자 등이 포함된다. 적대계급 가운데 죄과가 비교적 가볍고 본인들이 과오를 뉘우치는 자들에 한해서는 교양대상으로 선정하여 포섭한다. 그러나 사회진출이나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평생 최하층의 신분을 유지한다. 한편 죄질과 본인의 성향으로 볼 때 용납 불가능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며 독재대상으로서 대부분 ‘관리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980년대를 지나면서 세대교체 및 1세대들의 사망,

정치범들의 강제격리 등에 의해 정치적 우려가 없는 대상들을 소위 “포섭한다”는 명분으로 기본군중으로 격상시켜 왔다. 1970년대 초반의 경우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했던 복잡군중은 30여년간에 세대변화와 정책변화에 따라 상당히 감소한 반면 그만큼 기본군중은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에 복잡군중으로 분류되었던 자들이 부모세대로 성장하면서 그동안 자리잡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아 그들의 자녀세대는 기본군중으로 전반적인 상향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복잡군중은 전체인구의 20%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위계구조상에 있는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성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며 사회적 대우에 따라 스스로 평가한다. 정치적 위계구조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직업구조상의 분포도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성분별 위치를 인식한다. 국가기관의 직책은 고급 국가공무원, 국영기업이나 관료조직 내의 감독자나 관리자, 전문기술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 통상적인 비육체노동-판매직 종사자나 육체노동-서비스직 근로자, 반숙련-비숙련 육체근로자 등의 위계서열상의 직업분화로 표현된다.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자신을 대우하는 조치들을 통해 자기의 성분을 확인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는 강화된다.

다. 정치적 위계구조의 변화

성분에 따른 북한의 차별적인 계급정책은 이데올로기적 지향과 역사적 배경에 의해 형성·발전되어 온 것으로 북한사회 불평등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특히 한국전쟁의 피해자들을 핵심계층으로 등용하여 진학, 취직, 승진 등 사회적 혜택을

제공한 반면, 부역자·월남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소위 ‘반동분자’로 낙인찍고 사회적 차별정책을 엄격히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분정책의 경직성 내지 불합리성으로 인해 복잡계층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특히 주민들의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 차단됨으로써 노동의욕이 상실되었다. 또 혁명분자로 규정된 자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정치적 불만을 갖게 되었다.

1961년 3월 27일 당 상무위원회는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고 반혁명요소로 낙인 찍힌 사람들에 대해 당과 정부를 신뢰하고 경제건설에 동참하도록 하자는 새로운 완화정책을 제시하였다.⁴⁶⁾ 이는 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다시 강조되었다. 1970년대에도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는 끊임없이 융통성있는 성분정책의 적용을 강조해 왔으며, 김정일의 대국민 정치활동이 가시화된 1980년대 중반 김정일의 지시로 성분완화정책이 시도되었다. 북한은 ‘적대계급’이 더 이상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약화되었다는 판단과 성분위주의 신분차별적인 정책이 후계체제 완성에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경직된 성분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⁴⁷⁾ 즉 기존의 엄격성을 다소 완화하여 가정주위환경이나 경력상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현재의 사상정신상태와 동향에 큰 문제가 없으면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고, 역으로 성분이 좋더라도 본인의 현재 동향에 문제가 있으며 배격하는 등 성분정책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는 행정이나 경제부문의 간부인사에 국한된 것으로 당이

46) 북한연구소, “북한의 계급정책,” 양호민 회, 「북한사회의 재인식 1」(서울: 한울, 1987), p. 329.

47) 현성일, “북한 인사제도 연구,” (미발표 논문), p. 10.

나 군부, 외교부 등 권력기관에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특히 일반주민들에게 이러한 성분완화정책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1987년 북한이 제작·상영한 영화 「보증」은 성분정책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 영화는 과거의 경직된 성분정책에서 탈피하여 현재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김정일이 1985~86년경 지시한 성분완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속에 등장한 월남자 가족의 삶은 생활현장에서 성분에 따른 사회적 차별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⁴⁸⁾

북한은 1993년부터 “기본군중 뿐만 아니라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는”⁴⁹⁾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러한 사회통합 이념을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과거의 계급적 성분에 의한 정치를 탈피하여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새로운 군중노선으로 주민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발표한 논문에서도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각 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폭넓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⁵⁰⁾라고 주장하고 사랑과 믿음의 정치실현을 한층 강조하였다.⁵¹⁾ 이러한 관점에서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통치이데올로기

48) 이 영화는 어느 노동자가 남한에 가족을 둔 월남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작업현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겪고 사회·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49) 「로동신문」, 1993. 1. 28.

50)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 11. 4.

51) 김정일은 이 논문에서 주체 및 주체사상이라는 용어 보다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주체’라는 단어는 18번, ‘주체사상’이란 단어는 9번 사용된데 비해, ‘사랑’은 38번, ‘믿음’은 27번, ‘인덕정치’는 14번 사용하였다. 사랑, 믿음, 인덕정치라는 용어들이 주체, 주체사상이란 단어들보다 3배나 더 자주 쓰여졌다. 백웅진, “김정일 비서의 논문 「사회주의는

창출을 위해 로동당은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넓은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인덕정치’, ‘광폭정치’가 만약 심도있게 실시된다면 중요한 사회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일찌기 당과 주민간의 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침 아래 복잡군중을 포섭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새로운 사회통합이데올로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폭정치를 통합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사회적 갈등도 증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분정책 등 정치적 불만으로 인한 불평등 의식과 사회갈등은 사회통합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북한이 최근 북한내 이산가족들에 대한 서신교류 및 상봉을 주선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98년 3월 1일부터 사회안전부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하고 이산가족찾기 사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조치가 김정일의 ‘광폭정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월남자 가족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조국을 버리고 떠난 ‘반동분자’들로 간주되어 온갖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 왔다. 경직된 성분정책에서 탈피하여 정치·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복잡군중들에 대해 불평등을 시정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월남자가족은 여전히 반동분자라는 차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을 찾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월북자의 이산가족을 의미⁵²⁾하는 것으로 복잡군중에 대한 차별정책은 여전히

과학이다」에 관한 평가, 「통일한국, 1995년 7월호, p. 81.

52) 북한은 이산가족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88년 월북한 이우갑씨(당시 군산실업전문대 교수)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방영하였다. 「평양방송, 1998. 7. 5.

지속되고 있다. 성분정책에 의한 불평등의 요소가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치적 위계구조를 형성한 중추적 요인임엔 틀림없다.

2. 계급구조와 불평등

가. 계급구성과 계급관계

(1) 계급구성

북한사회의 계급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인구에 관한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다 직업과 소득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산업별 인구와 전문인력 및 서비스 분야 인구에 관한 자료 등 수집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북한의 계급구조만을 살펴본다.

해방직후 북한은 약 85%가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였고 광공업에 8.7%, 상업에 3.9%, 그리고 행정관료가 2.9%를 차지하는 농민중심의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은 지주(3%)와 자작농(15%)을 제외하면 나머지(82%)는 모두 소작농, 농업노동자, 화전민 등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던 농민들이었다. 1946년에 실시한 토지개혁('46.3)과 중요산업 국유화('46.8), 전후의 농업협동화('54~'58.8) 등으로 농민중심의 계급구조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주축으로하는 사회주의적 계급구조로 서서히 이행하였다. 1946년에 74.1%를 차지했던 농민은 전쟁직후 66.4%로 감소하였고, 농업협동화가 추진된 이후 1960년에는 44.4%로 줄어 들었다. 반면 노동자는 1946년의 12.5%에서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는 21.7%로, 그리

고 1960년에는 41.3%로 각각 증가하였다. 사무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46년의 6.2%에서 1960년에 13.7%로 늘어났다.

사회주의 제도개혁이 마무리된 1960년대에는 계급구조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농민의 비율은 44.4%에서 44.0%로, 사무원은 13.7%에서 14.0%로, 노동자는 41.3%에서 42.0%로 각각 감소 또는 증가하였으나 근본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70년대 들어서 북한은 소위 '3대혁명'의 일환으로 기술혁명을 추진한 결과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계급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1987년에 협동농장노동자가 25.3%, 국영기업노동자가 57.0%, 사무원이 16.8%를 차지하는 직업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3년에는 노동자가 63.1%로 증가한 반면, 농민과 사무원은 23.5%, 13.4%로 각각 감소하였다(<표 1> 참조).

<표 1> 북한사회의 계급구조

단 위: %

구 분	연 도						
	1946	1953	1960	1972	1986	1987	1993
국영기업노동자	12.5	21.2	38.0	42.0	56.3	57.0	63.1*
사 무 원	6.2	8.5	13.7	14.0	17.0	16.8	13.4
농 민	74.1	66.4	44.4	44.0	25.9	25.3	23.5
협동기업노동자	-	0.5	3.3	-	0.9	0.9	-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협동기업소 노동자 포함.

자료: Nicholas Eberstadt &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p. 135; 노용환·연하청, 「북한 인구센서스의 정책적 함의: 인구구조의 특성」(서울: 보건사회연구원, 1997), p. 54; 1972년의 통계는 북한경제자료집(1986) p. 36에서 인용

농민과 사무원이 감소하고 노동자층이 증가한 이유는 산업화의 진

전과 더불어 농민들이 노동자로 진출함으로써 노동자층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주민을 노동계급화한다는 이념 아래 농민, 지식인, 상업과 서비스 인구층도 모두 노동자계급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이념적으로 '협동적 소유' 보다는 '전인민적 소유'를 목표로 협동농장을 국영화하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라 하더라도 국영농장에서 일하는 농민은 노동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노동자와 농민

노동자는 1993년 현재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11,004,842명 가운데 6,944,058명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한다. 농민은 2,588,952명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영농장에서 일하는 농민을 노동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민의 수는 이보다 더 많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 발표한 직업별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41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0.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업인구를 이보다 훨씬 높게 잡고 있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에 따르면 1996년 현재 북한의 협동농장수는 3,220개소로 농장원은 가족을 포함하여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국영농장수는 1,241개소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농장원은 가족을 포함하여 300만명으로 추산 된다.⁵³⁾ 이 기준에 의하면 농민은 800만명에 이른다. 이는 북한의

53) 방관호(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최근 북한의 농업현황과 식량사정," 민족통일연구원 초청세미나 (1997.4.2).

<표 2> 북한의 산업별 인구분포 (1993년)

구 분	인구수(명)	구성비(%)	여성인력비중
농 업	4,118,332	30.7	53.34
공 업	3,381,930	37.4	49.20
건설·지질	464,366	4.2	24.17
운수·통신	402,477	3.7	29.11
국영농장·시	250,787	2.3	39.11
상업·조달	508,630	4.6	68.33
교육·문화·보건	843,647	7.7	59.76
기 타	1,034,673	9.4	38.97
합 계	11,004,842	100.0	49.46

자료: 노용환 연하청, 「북한 인구센서스의 정책적 함의: 인구구조의 특성」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1997), p. 55.

공식통계인 412만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기준으로 가족인구를 포괄적으로 계산하면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다.

사회주의 계급관계에서 드러나는 불평등의 특징은 노동자에 비해 농민이 차별을 받는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차별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예컨대 직업동맹은 1945년 11월 30일에 결성했지만 농근맹은 20년 후인 65년 3월 25일에야 결성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되고 있다. 또 ‘도시처녀 시집와요’라는 유행가를 선전할만큼 농촌은 선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수준도 낙후되어 있어 농민들은 자녀교육, 직장배치, 사회진출, 결혼 등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농민의 자녀들은 도시노동자로 진출

하기 위해 군입대를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농민의 사회적 지위는 노동자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농민에 대한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는 '전인민의 노동계급화'라는 슬로건 아래 농민도 노동자와 같은 계급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우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유일한 계급은 노동계급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의 기계화를 통해 노동계급의식을 가져야 하며, 인테리들은 조직활동을 통해 노동계급의식을 확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소득수준은 노동자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 이래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차이는 계속 커져 90년대에는 농민의 소득이 노동자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⁴⁾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농민들은 정부의 배급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폐의 가치가 크지 않은 북한에서 소득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민들이 노동자에 비해 느끼는 상대적 열등감을 어떻게 상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는 농민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무직과 같은 인테리계급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문예물을 통해서 볼 때 육체노동에 대한 열등감과 사회적 차별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⁵⁾ 문예물들이 그러한 경향

54) 김용기,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임홍철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학출판부, 1987), p. 211; 김귀옥·김채운, "변혁기 북한의 계급과 계급정책," 김채운·장경섭,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p. 210.

55) 서재진, 「또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출판, 1995), 237~245.

을 비판하기 위해 창작되지만 육체노동에 대한 열등의식과 인테리계급에 대한 선호의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3) 인테리계급

계급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주의공업화 과정에서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의 위치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신중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주의적 이념상 핵심계급인 노동자, 농민보다 사실상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사회적 상승이동은 사무직 및 근로인테리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관료집단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직업성분별 구성비

기 별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제4기(1967)	63.9	15.1	20.8
제5기(1972)	64.1	13.1	22.6
제6기(1977)	42.8	11.0	46.2
제7기(1982)	34.6	10.2	55.2
제8기(1986)	36.4	12.0	51.6
제9기(1990)	-	-	64.0
제10기(1998)	-	-	-

자료: 국토통일원 편,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표 3>에서와 같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직업별 출신성분을 보더라도, 1972년 23%, 1982년 55%, 1990년 64%로 사무원출신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는 숫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

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진출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사회정치적 지위가 추락하고 있는 반면, 인테리계급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기능적 측면에서 사무원·전문직의 중요성이 증대하여 노동자와 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북한의 기술자 및 전문가수(1993년)

구분	인원수	경제활동인구대비(%)
기술자	829,420	7.5
(기술자)	(376,328)	(3.4)
(준기술자)	(453,092)	(4.1)
전문가	960,498	8.8
(전문가)	(534,459)	(4.9)
(부전문가)	(426,039)	(3.9)
합계	1,789,918	16.3

자료: 노용환·연하청, 「북한인구센서스의 정책적 함의: 인구구조의 특성」, p. 57.

또한 <표 4>에 의하면 기술자와 전문인 등 북한의 인테리수는 180만명 정도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1993년 현재 남한의 전문가·기술자 및 준전문가의 수가 전체 취업인구의 12.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기술자·전문가의 수준은 남한기준에 비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⁵⁶⁾ 각 기업소에 종사하는 기술자

56) 노용환·연하청, 「북한 인구센서스의 정책적 함의: 인구구조의 특성」, pp. 59~60.

는 829,420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7.5%를 차지한다. 숙련된 기술자는 376,320명, 비숙련기술자는 453,092명이다. 또한 전문가는 960,498명으로 부전문가 426,039명을 제외한 전문인력은 53만여명이다. 전문가는 교원, 의사, 예술인 등 주로 인문·사회과학과 교육·문화·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의 <표 2>에 따르면 교사, 의사, 예술인 등 교육·문화·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는 843,647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문화·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인구가 전문가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⁵⁷⁾

북한은 인테리계층이 독자적인 사회정치적 세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노동자·농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하지만,⁵⁸⁾ 과학자·기술자·교원 등 전문인테리의 성장을 자랑하고 있다. ‘모든 계급의 노동계급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구호와 ‘온 사회의 인테리화’라는 현실적 필요간에 내재하는 상호모순이 노정된 것이다. 북한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노동계급화한 기초 위에 이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인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경제난이 악화된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지식인과 과학자의 역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주장하며 1992년 12월 정권수립이후 최초의 「조선지식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식인의 성장을 과시하였다. 199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정일은 “우리 당은 올해 총선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크게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학자·기술자들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는 악화된 경제난을 자력갱생적 원칙하에서 타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전문가들의 우대가

57) 의사수는 1986년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약 5만5천명으로 추산되며, 대학교수는 1983년 전문대를 제외한 정규대학만을 대상으로 할 때 7,111명으로 추정된다. 방환주, 1989 유제천, 1988, p. 258.

58)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85.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과학자·기술자에 대해 우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98년 9월 정권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함으로써 과학자·기술자들의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북한정권이 향후 목표로 내걸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과정에서도 과학자·기술자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 소득 및 배급 불평등

(1) 소득불평등

북한은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에 의해 보수⁵⁹⁾기준을 결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중노동 가운데서도 유해노동 종사자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어 있다. 동일직종에서는 숙련도나 생산성 등 노동의 질에 따라 급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대체로 사무원보다 기술직의 보수가 높으며, 당·정 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⁶⁰⁾

한편 협동농장원들은 도시의 노동자·사무원과는 달리 농장원이 1년간 제공한 노력공수, 즉 생산 또는 작업에 기여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다. 대개 연간 총생산량에서 종자·비료대, 농기계임대료 등 생산비와 협동농장 공동기금을 공제한 나머지 40% 정도를 농장원들의 노력공수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국영농장의 농장원들은 노동자로 간주하여 보수를 받는다. 앞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민들의 종합소득수준은 노동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59) 북한은 노동자가 받는 보수를 '임금' 대신 '생활비'라고 부른다.

60) 통일원, 「'95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5), p. 295.

<표 5> 직종별 보수 및 소득 수준

(단위: 북한 원)

구 분	직 책	임금 또는 소득
당·정기관 근로인테리	당부장·내각상	430~500
	내각부상, 도인민위원장	360~430
	도인민위 부위원장, 군인민위원장	240~290
	사무원	85~100
공장·기업소 근로인테리	특급기업소 지배인	360~430
	1~2급기업소 지배인, 기사장	220~290
노동자	광부·제철·제련공	130~140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110~115
	일반노동자	100~115
농민	협동농장농민	250~280
교육·문화 인테리 및 서비스 사무원	대학교수	250~300
	의사(1급의료원)	250
	일반교원	90~120
	여관·식당·이발소·상점 등	70~115

자료: 이 표는 통일원, 「북한개요 '95」(서울: 통일원, 1995년), p. 296를 근거로 북한이 1992년 2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발표한 전체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 평균인상율 43.4%를 적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표 5>에 나타난 북한의 직업별 보수수준을 보면 최저 70원에서 최고 500원까지 분포도를 이룬다. 당·정기관의 부장과 인민위원장 등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수는 400원~500원선으로 매우 높고, 각급 기업소 지배인의 경우도 300원선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고위층이나 기업소 지배인 등 특수계층은 북한 인구의 1%정도에 불과하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사무원들은 70~150원을 받는다. 일반 노동자는 기능별로 최고 1급에서 최저 8급까지 구분되어 있고 기사의 경우도 산업·직종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보수는 70~140원으로 일반 노동자들간의 보수격차는 2배이상을 넘지 않는다.⁶¹⁾ 기술엘리트들의 정치

61) 관광객을 안내하는 지도원의 임금은 180원, 1-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식당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긴 했지만 최고급 기술노동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소득면에서는 이들 전체의 차이가 3배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사회의 보수구조 자체는 실질적으로 각 계층간에 심각한 불평등을 보여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 소유가 금지되고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반면, 기호품이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이중가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심각하게 드러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직급 및 계층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사회적 혜택을 계산하면 불평등은 커진다.

<표 6> 남북한 소득분배의 비교* (1996년, \$)

소득 10분위	남한	북한
0-10%	1,740	420
10-20%	3,114	600
20-30%	3,924	.
30-40%	4,614	.
40-50%	5,266	700
50-60%	5,981	.
60-70%	6,759	.
70-80%	7,829	800
80-90%	9,392	.
90-100%	14,664	900(~3,000)
1인당 NGP	6,329	720

* 남한의 자료는 GNP를 현실화한다는 차원에서 IMF체제하의 환율(1달러=1,500원)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1996년 당시 실제수준 보다 평가절하된 반면, 북한의 자료는 공식환율(1달러=2원)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수준 보다 평가절상되었음.

여종업원의 임금은 약 90원, 1-5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뢰원의 월급은 130원 정도 등이다. 이재정,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98.6.9).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과 비교해보면 북한 주민의 대부분(98~99%)은 남한주민의 최저소득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 남한의 1인당 GNP는 10,548 달러⁶²⁾였으나 GNP의 현실화 차원에서 IMF체제 하의 평가절하된 환율(달러당 1,500원)을 적용하면 1인당 GNP는 6,329달러로 낮아진다. 한편 <표 5>에 나타난 북한의 일반근로자의 연간수입은 공식환율(달러당 2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420~900 달러로 환산된다. 남한의 하위 10% 인구가 차지하는 1인당 평균 GNP는 1,740 달러⁶³⁾로 북한노동자의 최고수준을 넘는다(<표 6> 참조).

북한은 노동자들의 임금 이외에 “식량공급과 살림집의 보장, 특혜적 조건에 의한 옷공급, 무료교육과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보장, 완전한 무상치료와 국가부담에 의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유급휴가제와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국가 및 사회적 비용에 의한 유치원 및 탁아소의 운영” 등 국가·사회적 혜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⁴⁾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받는 배급 등 각종 사회적 혜택을 총수입의 2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⁶⁵⁾ 북한의 일반근로자의 연간수입은 840~1,800 달러로 남한주민의 하위 10%의 소득수준과 비슷해진다.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120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달러로 환산하면 720달러로 역

62) 통계청, 「1997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1997), p. 137.

63) 통계청, 「1997 한국의 사회지표」, p. 153.

64) 과학·역사사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 (평양: 과학·역사사전출판사, 1982), p. 93.

65) “노동자들의 식의주 문제 해결에서만 하여도 내집에서 한해동안에 1천 300-1천500원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근로자들이 월평균 100-125원이라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로임외에 더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7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3), p. 281.

시 10% 수준에 머문다. 이러한 계산은 물론 개략적인 것이지만 북한 근로자의 소득수준은 하위 10%의 남한주민의 소득수준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내각상급의 월급을 달러로 환산하면 연간 3,000달러이며 국가적 혜택을 감안하면 6,000달러가 된다. 3,000달러로 계산하면 남한주민소득의 하위 20%(3,114달러)에 해당하며, 6,000달러로 잡는다면 50%~60%의 남한주민의 소득수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고위층이 북한내에서 누리는 정치·사회·문화적 특혜를 고려하면 남한주민의 50~60%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겠지만 적어도 소득의 측면에서만 보면 남한의 중상층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월 200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도·시 단위의 고급행정관료, 특급 및 1,2급 기업소의 지배인, 당비서 및 기사장, 1급 의사, 대학교수, 인민배우, 공훈배우, 유명 체육인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월 200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인구의 2~3%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연간 1,200달러 정도로 일반노동자들보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북한전체인구의 10%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보수와 소득수준은 지금까지 발표된 것보다 훨씬 낮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공식환율이 달러당 2.14원 인데도 나진·선봉지역의 환율이 달러당 200원임을 고려하면 북한주민들이 받는 보수와 소득은 실물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극히 낮은 수준이 된다. 또한 북한은 1997년 6월 유엔에 보고한 자체 경제평가서를 통해 1989년 1인당 GNP 911 달러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1995년의 1인당 GNP가 239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였다.⁶⁶⁾

66) 북한 중앙통계국 및 무역은행;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336호(97.6.21~

이러한 수치는 방글라데시의 1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하며 중국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그동안 지나치게 부풀려졌던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고 GNP규모를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소득분포 자체는 남한의 소득분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사회'이기 때문에 직업과 직위에 따른 소득격차가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절대소득 수준에서 보면 남한의 하위 10%의 소득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분과 직위에 따라 주택분배, 식량배급, 문화생활 등 중요한 생활설비에 관련된 것들이 국가의 행정적 배분에 의해 할당되기 때문에 소폭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의 차이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균등분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소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질적 삶의 향상과는 관계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북한의 소득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1984년 이래 추진되어 온 소폭의 개혁·개방정책과 1992년의 노동자임금 상승이 소득별 계층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1984년부터 시작된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과 터밭의 이용강화 및 직매점 개설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사적소득 채널이 생겨났고, 합영회사 등장, 시베리아 벌목노동의 증가, 암시장의 형성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이 형성되어 불평등 요인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개혁·개방의 제도적 장치들을 이용한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고 있다.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

27), p. 16 (대미환 적용). 북한은 기존에 2,430달러(88년), 2,460달러(91년), 719달러(96년) 등으로 발표해 왔다.

라 간부들이 암시장을 통한 개인장사 등으로 부를 축적함으로써 새로운 계층으로 특권을 누리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⁶⁷⁾ 장마당에서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인구가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자본주의적 상인계층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호기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과정에서 개혁·개방의 수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소득격차가 악화되었던 사실을 유념해 볼 때, 북한에서도 개혁·개방 시기의 소득구조의 변화에 대해 주시해야 할 것이다.

(2) 배급불평등

북한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배급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직접적인 보수소득 이외에 각종 배급 및 교육·의료시설 이용 등에 따른 부대소득을 정규소득과 맞먹는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대소득이 직급별로 차등배급됨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특히 주택배정과 식량배급은 사회적 계층과 성분에 따라 엄격하게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은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주택, 독립가옥 등의 종류가 있으나 특호에서 4호까지 5등급으로 분류하여 배정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형태와 평수에 차이가 난다. 최고급주택인 특호주택은 단독 고급주택으로 당 부부장 및 내각 부상급 이상 또는 인민군소장 이상의 고위간부들에게 배정된다. 신형고층아파트인 4호주택은 중앙당 과장급과 정무원 국장급, 인민배우, 공훈예술인, 대학 교수, 기업소책임자 등에 돌아간다. 특호 및 4호주택은 60평 내지 40

67)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64~67.

평 정도의 크기로 전체주택의 약 15%를 차지한다.

중급의 단독주택과 신형아파트인 3호주택은 중앙기관의 지도원이거나 도급기관의 부부장 이상 또는 기업소부장 및 학교교장 등에게 배정된다. 2호주택은 일반아파트로 도급기관의 지도원과 시군의 과장급, 기업소과장급, 학교교원과 천리마작업반반장 등에게 배정된다. 2~3호주택은 전체주택의 약 25% 정도에 해당한다. 한편 1호주택은 집단공영주택과 농촌문화 주택, 그리고 구옥 등으로 일반근로자와 사무원, 협동농장원, 농촌지역주민 등에게 배정된다. 농촌에서는 최근 시리카트(규토) 벽돌로 지은 2~3층 다세대주택이 보급되고 있다. 1호주택은 전체주택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거주하는 주택을 보면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을 알 수 있다.

일반주민들의 심각한 주택난과는 다르게 특권층을 위한 이른바 '선물주택'이란 것이 존재한다. 김정일은 90년대 초반 평양시내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건립된 수백가구의 아파트를 측근이나 충성파 인물들에게 선물로 배정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선물주택'은 김정일이 뽑은 공훈배우 이상의 예술인, 국제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체육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공로가 큰 과학자 등에게 제공된다. '선물주택'은 주로 평양시 창광거리와 보통강구역, 서장동 및 대보동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0가구가 살고 있는 서장동의 26층 아파트는 가구당 부역을 포함 5~7개의 방이 있고 평화화력발전소의 폐열을 난방원으로 공급받고 있음에도 별도의 가열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고급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⁶⁸⁾

68) 주택보급율은 약 70%정도로 남한과 비슷한 형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7년 이후 연간 15~20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주택정책을 추진해 왔다. 북한은 특히 78~84년의 2차 7개년계획과 87~93년의 3차 7개년계획 기간중 평양 등 대도시에 대규모의 주택건설을 추진해 80년 10월 평양 창광거리에 고층아파트를 세운데 이어 문수거리에 1만여세대의 고층

식량공급도 직급에 따라 다르게 배급된다. 1957년 11월의 내각결정 96호와 102호에 따라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협동농장 농장원들은 연말결산때 1년분의 식량을 현물로 분배받는다. 식량배급은 성분, 직위, 직종, 연령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지역,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배급절차는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급카드로 리·동배급소에서 수령한다.

모든 식료품은 차등으로 지급되는데 매일공급대상, 1주공급대상, 2주공급대상, 월공급대상, 인민반공급대상 등 5계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매일공급대상에는 당중앙위 정치국 정위원 및 후보위원, 당비서, 중앙당부장, 서기실요원, 김정일호위담당장교 등이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호위총국 공급과에서 배급을 전담하는데 1인당 쌀 700그램을 포함하여 필요한 양의 식료품이 충분히 제공된다.

1주공급대상에는 중앙당부부장, 내각총리, 인민무력상 및 사회안전상, 장령급군인 등이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식량공급은 당재정경리부에서 담당하며 1인당 700그램의 주식(쌀6:잡곡4) 등이 제공된다. 월공급대상자는 특별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당간부들로 직위와 직종에 따라 다시 1호공급소, 2호공급소, 3호공급소, 4호공급소로 분류된 해당 공급소에 미리 지급된 공급카드를 제시하고 월공급량의 범위안에서 직접 식량을 공급받는다. 이들에게는 1인당 700그램의 주식과 공급소별로 다른 부식이 배급된다.

일반공급대상자들은 통상 1개월 단위로 일정량의 식량이 공급되어 형식상 1개월 공급대상자와 비슷하나 이들은 노동자, 농민 등 일반주

아파트를 건설하였다. 87~89년의 광복거리 1단계 공사와 90~93년의 광복거리 2단계 공사(3만세대) 및 통일거리 조성(2만세대) 등을 완공한데 이어 각 지방도시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중에 있다.

민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에게는 주식은 통상 15일에 1회 동 배급소에서 1인당 700그램(쌀 3:잡곡 7)이 공급된다. 부식은 '부식구 매카드'를 식료품상점에 제시하고 구입한다.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은 일정기간 필요한 양을 일괄구입할 수 있으며, 콩나물, 야채 등은 식료품공장에서 임의로 구입이 가능하다.

교육·의료 서비스도 직급별로 차이가 난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특수교육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북한은 1983년 9월 평양을 비롯한 각 도 및 직할시에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하여 과학영재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등의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혁명유가족 및 당·정고위간부의 자녀들을 입학시켜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당·정기관의 행정적 배분의 담당계급을 충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대부분이 신중간계급의 상층성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진학자체가 이미 혁명유가족이나 당·정의 고위간부자녀들로 제한됨으로써 교육자원에 대한 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사회전체적인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병원시설은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으로 구분되며 위생과 방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위생방역소가 있다. 일반병원으로는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진료소와 남산진료소가 있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십자종합병원, 제1·2·3 인민병원, 평양의대부속병원 등과 내각 산하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부 제1병원, 운수종합병원, 해군·공군 중앙병원 등이 있다. 그리고 헝가리의 지원으로 건설된 헝가리병원, 재일조총련교포가 건설한 김만유병원 등이 있으며, 전문분야 병원으로 평양산원, 평양시립동의병원, 평양중앙결핵병원 등이 있다.

신분에 따른 차별적 배급은 당에 의해 정책으로 결정되며 이는 곧 행정적으로 배분된다. 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은 내각의 1개 위원

회, 26성, 1원, 1은행, 2국에 의해 정책이 실행된다. 다양한 행정적 배분을 결정하는 최고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이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정책의 대강과 방향을 노동당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고 있고 노동당의 기본정책에 입각하여 모든 행정적 배분의 계획을 종합해서 작성하는 일을 맡고 있다.⁶⁹⁾ 자원의 행정적 배분은 내각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위계서열에 의한 차별적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다. 식량난 이후의 변화

1993년까지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을 마무리한 북한은 1994년부터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강조하며 ‘완충기’에 들어갔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배고프지만 근근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식량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식량자급율이 58.7%를 기록할 정도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었다.⁷⁰⁾ 1990년 이래 북한경제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1992년 이래 매해 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여 ‘완충기’ 이전에도 이미 총수요량의 60~70% 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 완충기 동안 북한은 경제분야에서 ‘정무원 책임제’로 전환하고 정책적으로 도·시·군 단위의 자급체제를 실시하고 있다.⁷¹⁾

북한의 경제상황은 지역별 자급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더욱 악화되

69) 국가계획위원회는 1964~65년 계획의 일원화, 세분화 방침이 채택되면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 행정적 배분은 전략적 측면에서 사회동원적 배분과 사회통제적 배분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한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불평등구조와 주민의 가치체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42.

70) 최수영,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69~74.

71) 김정일,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94.10.20),” 「김정일 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42~452.

었다. 김정일은 1994년 10월 “정무원이 경제사령부로서 나라의 경제 사업을 전적으로 맡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원책임제, 정무원중심제를 내놓고 모든 사업조건을 지어주었다”라고 언급⁷²⁾함으로써 1993년 12월 당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정무원이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전환했음을 시사하였다. 정무원이 책임을 맡으면서 각 도별, 시·군별로 식량공급 등 경제분야에서 자급자족적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식량자급체제를 대홍수가 시작된 1995년 이후가 아니라 1994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은 탈북난민들에 대한 면담결과에 의해서도 밝혀졌다. 탈북난민들의 견해에 의하면 94년 이후 배급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32.7%로 가장 많고 95년에 끊겼다는 사람(29.1%)과 93년에 끊겼다는 사람(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⁷³⁾ 즉 90년대들어 악화되기 시작한 식량사정이 94년 이후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이후 식량난이 악화됨으로써 하류층 취약계층의 생활이 극도로 빈곤해진 반면, 장마당과 암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인구도 늘어 남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중앙배급체계를 통한 식량공급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지역별·기관별로 식량을 자체조달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수계층과 군인 및 일반주민 등 각 계층별로 식량을 차등공급하고 특권계층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제의 지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이 꾸준히 나돌고 있다. 지역·시기별로도 약간 다르게 나타나지만 계층에 따라 식량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결속을 시도한 것

72)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4.

73)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의 실태」, (북한 식량난민 770명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1998.5), p. 16.

으로 보인다. 간부들은 정상적인 식량배급을 받지만 일반 노동자나 사무원들은 200~300g 정도로 감량하여 배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난이 계속되면서 일반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매우 커졌다.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만으로는 북한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자는 1996년 이후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노동자들의 보수가 총생활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이하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였다.⁷⁴⁾ 일반노동자들은 각급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후방공급'이나 생산성과에 따른 '우대상품' 등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⁷⁵⁾ 따라서 현재 북한사회에서 보수는 '생활비'라는 고유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의미가 축소되었다.

북한에서 경제침체와 식량난의 지속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극빈계층의 규모가 크게 늘어 났다는 점이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일반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하류층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식량난으로 기아상태에 처한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치 않지만 북한에 식량을 전달하는 국제구호기구는 현재 약 5백만명(전체인구의 1/4)의 북한주민이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⁷⁶⁾ 식량배급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하류층 주민이 급증하였다. 식량난으로 인한 수십만의 사망자도 빈민층 및 취약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⁷⁷⁾ 간부들은 지정된 병원에서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반군

74) 김승철, "북한 주민의 노동 의식에 관한 연구," 『통일경제』 (1998.7), p. 56.

75) 위의 글, p. 57.

76) WFP는 아사상태에 있는 인구를 기아에 직면한 어린이 260만명을 포함한 470만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합통신』, 1997. 3. 21.

77) 황장엽씨는 1995년 50만명, 1996년 100만명 등 150만명 이상이 사망했을

로자들은 인민병원의 의약품 부족과 치료시설 낙후로 인해 질병감염에 의한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

<표 7> 배급중단후 생활(복수응답)

배급중단 후 생활	응답수	응답빈도	인원빈도
나무,산나물,옷 등으로 장사를 했다	371	26.1%	49.5%
가구,집기를 팔아서	295	20.7%	39.4%
풀뿌리,벼뿌리,소나무껍질 먹음	288	20.3%	38.5%
친지의 도움을 받았다	155	10.9%	20.7%
도둑질	55	3.9%	7.3%
집을 팔아서	50	3.5%	6.7%
폐기물을 일구어서	43	3.0%	5.7%
구걸	42	3.0%	5.6%
식량을 구하러 다른 지역을 다님	37	2.6%	4.9%
약초를 캐어서 식량과 바꾸어 먹음	23	1.6%	3.1%
하루벌이를 했다	10	0.7%	1.3%
기 타	53	3.7%	7.1%
합 계	1,422	100.0%	189.8%

자료: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의 실태」(1998.5), p. 17.

장마당이 활성화됨에 따라 장마당과 암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인구도 늘고 있는 반면, 실물경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빈곤계층 가운데 아사자가 발생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식량을 구하러 중국

것이라고 증언했으며, 식량난민 770명을 면담조사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지난 2년 8개월('95.8~'98.3)동안 북한인구의 27%인 약 300만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미국의 대외관계협의회(CFR)는 적어도 100만명, 많게는 2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다소 과장된 듯 보이며 실제로는 수십만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병로,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상반기), pp. 133~161.

에 건너온 북한식량난민 7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 7>에 따르면 식량배급이 중단된 이후 농민시장 등에서 나무·산나물·옷·가구·집기 등을 팔아 장사(26.1%)를 하거나 가구·집기를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가며(20.7%), 풀뿌리·소나무껍질을 먹거나(20.3%) 친지의 도움(10.9%)을 받아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는 등 어렵게 연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식량을 구하러 타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2.6~4.9% 정도 되어 식량이 부족한 하층민들은 가족이 해체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등 극빈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3. 사회적 관계와 불평등

가. 연령구조

연령구조는 일차적으로 인구증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막대한 인적 손실을 입었고 무리한 병력증강정책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었다. 이러한 노동력부족을 메꾸기 위해 1960~90년 사이에 연평균 2.4%라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1970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3%를 훨씬 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2.0% 이하로 감소되었으나 남한이나 여타 신흥공업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구자원이 빈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정책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세 미만 인구가 41.3%, 20세이상 40세미만 인구가 37.2%, 40세이상 60세미만 인구가 15.8%, 60세이상 인구가 5.7%를 차지함으로써 연령구조는 전형적인 저개발국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높은 출산, 높은 사망으로 특징되는 '다산 다사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전후세대가 전체인구의 83.9%로 남한의 71.9%보다 훨씬 많은 매우 젊은 연령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중반에 이르러 청장년층의 인구비중에 비해 연소층의 규모가 감소되는 이른바 인구학적 천이(demographic transition)의 후기에 접어들었다. 즉 인구구조상 ‘피라미드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출생율을 보면 1960년대에 상승세를 보여 1970년에 1,000명당 45명 이상의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970년대에는 10년 동안 조출생율은 실제로 50% 정도나 하락한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의 출생율은 약간 더 낮아졌다가 그 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1990년대에는 경제침체와 식량난 등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영아사망율과 유아사망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북한 인구증가의 급격한 감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북한은 1976년 7월, 정무원 결정에 의해 남자 30세, 여자 28세 이상으로 결혼연령을 제한하였다. 북한은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함으로써 만혼을 권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중에는 결혼이 제한되고, 여자는 노동력 확보 등을 이유로 결혼이 지연되는데 통상 남자는 28~30세, 여자는 24~25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층의 기대수명도 과거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1960년대에는 기대수명이 10년 정도 증가했지만 80년대에 들어서는 약 3년정도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다. 1985~90년을 대상으로 한 유엔자료에 의하면 80년대 후반의 경우 북한사람들의 출생시 기대수명 추계는 멕시코나 인도양의 섬나라 모

리셔스의 예상치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⁸⁾

1990년대의 극심한 식량난과 '고난의 행군'과 같은 내핍정책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노인들이다. 어린이와 노인들은 식량난에 가장 빨리,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으로써 기아와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이다. WHO(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은 평북 박천군의 한 병원에서 1995년 10월부터 1997년 3월 사이에 소아영양실조가 3배 증가하였고, 감염성 설사와 급성 호흡기 질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은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감염성 설사와 급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히 많다. 탈북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9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60대, 70대 노인층의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⁷⁹⁾ 특히 의약품 부족과 치료시설 낙후로 인해 질병감염에 의한 사망도 늘어나고 있다.

1997년 7월 선명회(World Vision) 의료팀의 방북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평양, 원산, 사리원, 해주, 평산 등 5개 지역의 보육원, 어린이센터의 2세 이하의 유아 547명 가운데 85%가 영양실조 상태이고 29%는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98%는 발육저하 상태에 있다. WFP(세계식량기구)의 벤티니(C. Bertini) 사무국장은 북한의 어린이들의 손마디뼈가 드러났으며 영양부족으로 머리색갈이 붉은색으로 변했다고 밝히고 있다.⁸⁰⁾ 북한의 경제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식량공

78)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992 revision* (New York: U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니콜라스 애머스타트 저, 송명갑 역,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p. 145에서 재인용.

79)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의 실태」, p. 8.

80) *USA Today*, July 25, 1997.

급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선명회의 앤드류 나찌오스(Andrew Natsios)는 북한 어린이들의 상황은 1980년대 중반의 이디오피아 기근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평가한다.⁸¹⁾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어린이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 성별구조

북한은 맑스-엥겔스의 가부장제 철폐와 여성의 경제적 독립 및 참여를 공식화하여 이념적으로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남녀평등은 여성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노동력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북한은 여성의 노동력이 전체의 45.9%를 차지하여 남한의 33.9%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참여율도 남한의 51%인에 비해 훨씬 높은 85%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여성들의 노동참여를 높이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전국에 각각 28,358개와 19,262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밥공장을 건설하여 여성들의 가사일을 덜어주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율은 약 20% 정도 되어 지표상으로는 여성의 권익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위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990년에 7%정도를 차지한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서방 선진국에 비하면 떨어지는 것이지만 개발도상국가와 비교하면 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81) "The North Korean Famine"(August 26, 1997), <http://www.pbs.org/newshour/forum/august97/korea1.html>

<표 8> 북한직업의 성별 인구구성

단위: 천명

구 분	1986			1987			1993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국영기업노동자	6,830	2,990	3,840	7,135	3,134	4,003	6,944*	3,333*	3,611*
사 무 직	2,060	855	1,205	2,103	879	1,224	1,472	978	494
농 민	3,141	1,305	1,836	3,167	1,312	1,855	2,589	1,251	1,338
협동기업노동자	110	41	69	112	42	42	-	-	-
전 체	12,141	5,191	6,950	12,517	5,367	7,150	11,005	5,562	5,443

* 협동기업노동자 포함

자료: Nicholas Eberstadt &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조용환·연하청, p. 54.

그러나 이러한 지표상의 권리신장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불평등은 심각하다. <표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육체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2% 및 51.7%로 남성보다 높다. 정부기관 등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66.4%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노동참여 불평등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문화 생활과 가정생활 등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이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 억압받고 차별당하며 살고 있다.⁸²⁾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는 주장과는 달리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관행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들의 권익은 더욱 악화되었다. 부족한 식량구입은 어머니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난의 악화

82) 최의철·송정호, 「북한인권백서 1998」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41~46.

는 여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여성을 하대하고 여성들의 정당한 항의도 ‘버릇없는’ 행동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성희롱, 성추행 등의 여성에 대한 차별도 행해지고 있다.

남성위주의 성차별 현상은 한국전쟁으로 남성인구가 급감하여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쟁에서 전투와 국외이주에 의한 남자인구의 손실은 남한보다 북한쪽이 심했다. 전쟁직후 성비가 88.3까지 떨어졌으나 그동안 남아의 출생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1986년의 경우 성비가 105.1까지 상승⁸³⁾할 정도로 남아출생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성비는 97.5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엄청난 사회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업 상승이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물론이고 가부장적 남녀차별 행위패턴이 온존하고 있다. 결국 북한사회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상향이동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가부장적 남녀관계 및 가사노동 전담 등 성별 불평등구조에 묶여 있다고 하겠다.

다. 지역별 계층구조

지역간 불평등의 심화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농촌지역의 개발과 도시화를 통해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한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빠른 도시화를 추진하여 1960년대에 40%를 상회하는 북한 주민이 도시에 거주하는 등 남한보다 먼저 도시 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도시화는 점차 둔화되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 성장이 거의 멈춘 S자형의

83) Eberstadt and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 p. 65.

발전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전반적 경제 침체와 더불어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 성장률이 멈추어 있다. 평양, 함흥, 원산, 평성, 사리원 등의 지역과 1980년대에 출현한 순천, 단천, 덕천, 안주 등 신도시, 그리고 1990년대에 시로 승격된 개천, 회령, 문천 등의 도시는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생활형편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양을 제외하고는 기존 도시를 포함하여 그 어느 도시도 가까운 장래에 인구 1백만을 추월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개발도상국의 지역간 불평등은 거대도시를 이루고 있는 수도와 여타 지역간의 격차로 나타나는데 북한의 경우는 특히 평양과 다른 지역과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북한이 약 60%의 도시화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도시는 인구 3백만이 거주하는 평양 뿐이다. 평양은 여타 도시와는 다른 엄청난 차별적 행정배분이 주어졌으며,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매우 편향적인 발전을 해왔다. 이른바 ‘사회주의적 상징도시화’ 되어 있는 평양은 ‘혁명의 수도’, ‘주석의 도시’ 등 시내에서 관찰되는 외양이나 구호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적 구성 및 사회적 관계에서도 다른 도시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⁸⁴⁾

실제로 평양에는 당의 심사를 거친 모범인사들만이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타지역에서 평양을 방문하는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 북한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지난 80~84년사이 모두 3~4차례에 걸쳐 성분불량자와 신체장애자들을 외국인 출입이 없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후 평양시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김일성부자에게 충성심이 강하고 성분이 양호한 자’, ‘항일투쟁 및 한국전쟁 유가족’ 등 당성이 강한 핵심계층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문화생활에 있어서 체육시설과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등은 물론, 주민

84) 김문조·조대엽, “북한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아세아연구』 제35권 제1호, p. 35.

들의 휴식, 학습장으로 사용하는 회관 및 궁전, 학습당도 평양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사회에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신분상승 기회는 매우 좁으며, 이에 따라 최근 농촌지역 청소년들은 농촌을 빠져 나가기 위해 군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지역간의 계층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간 불평등 현상은 식량난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별 자급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식량공급의 지역간 편차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량배급이 대폭 감축됨으로써 생활상의 차이가 커지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 국제사회의 지원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간 수송체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 산간지역과 동부지역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하다.⁸⁵⁾ 특히 함경남도 지방은 수송체계의 미비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앞서 1993년부터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식량부족이 타지역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⁸⁶⁾ 북한 중앙배급제의 실질적인 기능이 약화된데다 에너지난 및 운송수단 부족 등으로 지역간 교류가 어려워짐으로써 산간 오지 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생활형편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85) 이금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98~99.

86)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의 실태」, p. 16.

IV. 불평등의 재생산 메카니즘과 지배구조

1. 사회이동과 불평등의 재생산 메카니즘

가. 사회이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며 불평등의 구조도 다차원적이다. 사회적 불평등은 권력관계로부터 연유하기도 하며 재산관계 및 사회의 분업구조에 의해 지속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평등 구조속에서 과연 사회적 이동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경로(career paths)를 통해 상향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1) 교육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적 상승이동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재산의 세대간 이동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교육에 의한 상승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⁸⁷⁾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정치권력이 집단구조를 형성하지만 모든 계층화가 정치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율적인 측면도 있다.⁸⁸⁾ 노동계급 내에 계층화가 되어 있다거나, 도시의 지식인들은 당과 정부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은 이를 증명한

87) Frank Parkin,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Social Stratification in Capitalist and Communist Societies* (London: Praeger Publishers, 1975), p. 154.

88) David Lane, *The End of Social Inequality?*, p. 154.

다. 이런 점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교육기회와 교육정도가 당과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세대내 및 세대간 사회이동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상승이동을 시도할 수 있는 열려 있는 통로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대학교육은 사회적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부, 권력, 사회적 위신이 모두 직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필수적이다.⁸⁹⁾ 대학졸업자나 전문학교 출신자들은 교육기간 중 국가의 학업보조를 가장 많이 받으며 취업시 대부분 정신노동에 동원되어 30대 중반에 이르면 고등중학교 졸업자나 인민학교 졸업자에 비해 훨씬 많은 보수를 받게 된다.⁹⁰⁾

현재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 진학률이 높지만 대학진학은 아직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1992년 현재 대학교수는 280개교이며, 대학생은 31만 4천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6년 현재 650개의 대학(원)과 141만4천명의 대학생이 있는 남한과 비교하면 북한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이다. 북한에서 대학생의 비율은 남한에서 1980년대에 대학입학 정원이 대폭 증대하기 이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은 어느 사회이건 사회적 지위를 얻어 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대학입시의 기준은 공평하고 엄격하게 적용된다. 남한에서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하지만 대학입시에

89)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5), p. 262.

90) 안해균, 「북한의 직업구조와 노동강화정책」 「북한사회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p. 471.

서 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대학입시를 치르기 위해 우선 국가가 각 대학별 입학 예정인원을 확정·발표하고 도별로 입학인원을 할당한다. 이에 따라 각 도는 입학예정인원을 ‘합리적’으로 배당하기 위해 시·군별로 ‘시·군 대학생 모집과’가 주관하는 대학입학예비시험적인 「국가관정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성적을 가지고 도내 학교순위와 학생들의 순위를 평가한다. 학교전체 성적이 좋아 좋은 순위에 진입한 학교는 그만큼 좋은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을 많이 할당받게 되며, 시험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⁹¹⁾

대학입학 자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학업능력은 1/3 정도만 반영된다. 각 고등중학교에서는 ① 개인별 성적 ② 정치적 성분(성분), ③ 학교생활(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어느 학교에 응시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성적 이외에 일차적으로 학교생활 및 출신성분과 같은 정치적·이념적 차별이 적용된다. 예컨대 북한에서 가장 좋은 김일성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시험성적도 좋아야 하지만 가족성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학생이 응시를 한다. 성적은 좋지만 성분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성분문제를 크게 따지지 않는 다른 대학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다.⁹²⁾ 따라서 핵심계층에 속한 성원은 그 당성이나 혁명성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기회가 여타 계층의 성원보다 열려 있고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도 크며, 이러한 특권을 다음 세대로까지

91) 북한은 1996년 2월, 신학기 시작을 종래의 9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함에 따라 3월과 7월에 치르던 예비시험과 대학본고사를 10월과 2월에 각각 치르게 되었다. 북한이 신학기를 왜 4월 1일로 변경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북한당국은 ‘기후적 이유’ 때문이라고 짧막하게 언급하고 있다. 국가시험의 대상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역사 등 6 과목이다.

92) 귀순자 김명세씨와의 인터뷰(1997.10.24).

전송시킬 수도 있다.

1970년대에 비해 80년대, 90년대에 이를수록 교육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70년대까지는 엄격한 성분정책이 시행되면서 특수계층들의 자녀들은 고등교육의 최우선 순위를 배정받았으나, 1980년대 들어 김정일이 “비서국비준간부 자녀들 중 남학생들은 무조건 병역의무를 마친후 해당 군부대의 추천으로 대학입학을 실시하라”는 방침을 내림으로써 일시적으로 능력에 의한 대학입학이 장려되기도 했다. 데모나 항의농성을 상상할 수 없는 북한사회이지만 교육문제에 관한 한 북한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인한 갈등도 발생한다. 예컨대 자기 자녀가 시험을 잘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입학이 거부된 경우 합격시비를 가리기 위한 학부모들의 항의농성도 벌어지는 사례도 있다. 귀순자 김명세씨에 의하면, 이러한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각 대학들은 대학 본시험을 치른후 3일만에 전격적으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상향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복잡군중에 속할 경우 자녀들의 고등교육 희망은 포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입학 문건에는 자서전, 가정환경, 성분신원조회서, 해당직장·학교의 평정서(당책임비서가 작성), 추천서, 학력보증서, 성적증명서, 졸업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군중의 신원은 쉽게 판별된다.

한편 북한은 핵심계층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 각 도별로 유자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 편제와 독립되어 있는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해주혁명유자녀학원」은 6년제의 특수학교이다. 이들 학교는 항일투쟁 및 한국전쟁중 희생된 인

민군 장병 및 빨치산들과 애국열사들의 유자녀들에 대한 특별우대 교육기관으로, 예비군사간부와 당정의 간부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은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학생들은 장교군복을 입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등 엄격한 규율속에서 학습 및 훈련을 받고 있다. 교육기간은 유치원 상급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포함한 11년이다. 교육내용도 당정책과 김일성·김정일의 사상체계를 충실히 받드는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북한사회 엘리트코스라 할 수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당정초급간부, 그리고 군장교 등으로 진출이 보장되어 있어 일반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족학교’로 불리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김정일이 수학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출신들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김정일을 비롯하여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조명록(인민무력성 총정치국장), 김국태(당비서), 전병호(당비서), 연형묵(국방위원회 위원, 자강도당책), 강성산(전총리), 서윤석(평남도당책), 김환(전부총리), 윤기정(재정부장), 오극렬(전군총참모장), 김광진(인민무력성 부상) 등이 있다.⁹³⁾

(2) 당

북한에서 당원이 되면 각종 회의, 학습, 총화, 사상투쟁 등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당원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원과 비당원의 사회적 대우가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입당을 원하게 된다. 당원칙과 북한사회의 관행이 일단 당원이 되지 않고서는 지배계층으로 이동할 수 없다. 초급간부에 등용되려면 당원이

93)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과 해주혁명유자녀학원은 각각 1958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학생수는 각각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되어야 한다. 또 가문의 체면을 유지하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원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 위계구조를 결정하는 가시적 기준은 당원인지 아닌지로 구분될 수 있다. 모든 행정적 배분이 당 및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원이 된다는 것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직에 오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현재 노동당은 약 300만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원 자체가 특수한 지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원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원을 확보하는 셈이다.

사회적 상승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직장내 조직구성통계'라는 것을 하달하여 집단내 노동당원의 비율을 몇 퍼센트를 유지할 것인가, 그 중 남녀비율은 몇 퍼센트를 보장할 것인가를 지시한다. 또 조직내의 당원은 노동자, 농민, 학생, 사무원, 군인 등 사회성분별로 구성비를 규정하여 항상 그 규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당기관내 기본직 성원들은 100%가 당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 정무원 등 중앙급기관 각 위원회 및 부서의 기본직 성원은 신규채용자를 제외하면 거의 당원들이다. 그러나 군, 사법, 안전부, 행정경제, 농업, 과학,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산하기관 단체는 내려갈수록 비율이 적어지며 최하부 말단 조직에는 전체성원의 10~20%를 유지하며, 많게는 3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나 기관의 중요성,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당원의 비율은 달라진다.

그런데 당원이 되는 것은 사회적 상승이동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당원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노동당규약은 당원이 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동안 후보당원을 거쳐야 한다.⁹⁴⁾ 동 규약은 만 18세 이상의 성원에게 입당자격을 부여

94) 「조선로동당규약」 제1장 참조.

하며 몇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후보당원(약 1년정도)으로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입당보증인은 최소한 2년 이상의 당 년한을 가져야 하며 피보증인의 사회정치생활을 잘알아야 하고 당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입당은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하에 결정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원은 철저히 당자체의 심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청원자의 과거와 현재의 사회정치적 활동을 평가하기 때문에 입당과정에서 출신성분에 따른 정치적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에 따라 구분된 계층적 위계는 반드시 다른 자원의 배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경제·사회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간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당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간부의 총원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간부부와 지방당위원회 조직부, 국가 및 정부와 사회의 각 부문 기관의 간부처 혹은 간부과에서 담당한다. 노동당 조직지도부 간부과에서는 당과 국가 정부의 최고위층의 간부후보들은 물론 장성급 이상의 군부·보안기관 고위층 인사 및 해외공관 파견 대사 등의 인사를 전담한다. 노동당 간부부에서는 조직지도부의 인사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와 정부의 국장급 이하 모든 간부들과 각급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한다. 각 지방당위원회 조직부에서도 하급간부들과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한다.

또한 간부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 비서국 비준대상,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비준대상 및 합의대상, 당중앙위 간부부 비준대상 및 합의대상, 그리고 각 도·시·군 당위원회 비준대상 및 합의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인 층원절차는 대상자의 선발과 추천, 인물심사 혹은 담화, 신원조회 및 현지확인, 신원보증 등을 실시하며 간부이력문건, 주민등록문건, 평정서 등의 각종 문건과 이력서, 자서전, 가계표 등의 양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간부선발시 계급적 토대, 출신성분, 본인의 현재사상, 노·장·청 배합 등 4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⁵⁾

중간간부로 진출하는 데는 각 지방에 설립된 공산대학이 큰 역할을 한다. 각 도소재지에 1개씩 배치되어 있는 공산대학은 1946년 북한이 각 도소재지에 도당학교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당·정권기관·경제기관·근로자단체에서 일할 간부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창설되었다. 이 도당학교는 1954년 3월 도인민위원회 간부학교와 통합하여 도간부학교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60년 9월 1일 도간부학교로 발전시켜 각 도의 공산대학을 창설하였다. 중요한 공장과 기업소에는 공산대학 분교를 두고 있다. 공산대학에서는 김일성저작과 혁명역사, 노동당, 국가, 근로단체, 경제관리 등의 과목을 배운다. 공산대학은 각 도의 지방간부를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당은 북한에서 사회적 상승이동을 위한 중요한 통로이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발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통로는 아니다.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의 경우 대학교육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소련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인물들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원이 되는데는 높은 학력이 필요하다.⁹⁶⁾ 출신대학에서도 김일성대학과 만경대학원 등 최고급 교육을 받은 사

95) 현성일, “북한 인사제도 연구,” (미발표 논문), p. 8~9.

96)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25~126.

람들이 주로 당간부로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동 경로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교육과 당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며 불평등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나. 불평등의 재생산 메카니즘

교육과 당을 통해 사회적 신분상승을 시도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과 입당은 가족배경과 출신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제약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비드 레인(David Lane)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족(nuclear family)을 통한 세습을 지적한다.⁹⁷⁾ 부모는 가족내에서 자녀들에게 사회에 적응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시킴으로써 그 사회와 문화의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물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부의 상속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적 배경에 의한 생득적 지위보다는 성취적 지위가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개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공산주의 정권 초기에는 가족의 영향력이 약화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는데 가족의 영향력은 커진다. 그 이유는 공산정권이 가족제도가 인간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질서와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가족내에서 전통적인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기득권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⁹⁸⁾

존 스코트(John Finley Scott)도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 과정에서 가족이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였다. 그는 가족내에서 동기부여와 훈련

97) David Lane, *The End of Social Inequality?*, p. 157.

98) Ibid, p. 157.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계층간 상승이동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사람들도 그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가족의 지위와 동일하게 대우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차별적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족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⁹⁹⁾ 따라서 가족구성원 가운데 서로 다른 지위를 갖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대개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게 된다.

북한에서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근저에는 가족제도가 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된 이래 대학입학이나 사회적 진출, 간부로의 출세 등에서 가족의 역할은 매우 크다. 가족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쳐온 요소로서 매우 생득적이고 귀속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토대’, 즉 성분을 담고 있는 가장 손쉬운 평가단위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토대는 직계가족 및 친인척의 체제 건설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바, 이런 의미에서 북한에서 가족, 가계가 지니는 의미는 자못 크다. 더욱이 북한은 협소한 범위의 ‘토대’에 바탕해 핵심 권력엘리트를 구성하게 된 까닭에 이를 뒷받침할 중간간부도 그들의 직계 및 친인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북한은 네포티즘(nepotism)에 바탕한 친척과 가족 중심의 사회적 지위상승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특징을 보인다.

당원충원과 간부선발의 기준에 있어서 가족배경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북한에서는 타 사회주의체제에서 발생했던 소위 홍·전(red-expert)의 노선대립 또는 대체는 존재하지 않았다.¹⁰⁰⁾

99) John Finley Scott, "Ascription and Mobility," in Gerald W. Thielbar and Saul D. Feldman (eds.), *Issues in Social Inequality* (Boston: Little, Brown, 1972), pp. 580~597.

100) 많은 사회주의 연구가들은 사회주의체제의 각 조직이 비대해지고 복잡성을 더해 감에 따라, 이념 중심의 간부보다 전문성을 갖춘 간부의 역할과 비중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문관료가 다수 상승이동을 하였고, 1998년 출범한 내각에는 전문관료가 대거 등장하여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테크노크라트가 전면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타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홍·전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계층의 자제들 중에서도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간부의 기본조건을 갖춘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소위 '토대'가 좋은 가족은 체제의 수혜자로서 특권을 부여받게 되고 이들의 자제들마저도 체제의 '핵심계층'으로서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가족은 계층간 사회적 이동과 관련하여 부친의 직업적 배경 또는 신분적 배경을 중요시하는 북한사회에서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된다.¹⁰¹⁾

한편 북한에서 1970년대까지는 가족의 역할이 약화되었지만 1980년대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가족주의가 빠른 속도로 부활하였다. 1980년대 들어 가구소득의 감소에 따른 여성들의 대남성 의존도가 증가하였고 경제침체에 따른 남성가장들의 사회적 불만이 늘어나자 이를 가족이라는 제도적 틀내에서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⁰²⁾ 1990년 10월 24일에 제정된 북한의 「가족법」은 이와 같은 북한 가족정책의 탈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족법」에서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산을 대거 회복시키고 있다. 즉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는가 하면 친족부양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내에서 개

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자와 저작으로는 William A. Welsh, "Comparative Political Leadership in Communist Systems," in Carl Beck, et al.,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David McKay Co., 1973); John A. Kringen, "An Exploration of the 'Red-Expert' Issue in China through Content Analysis," *Asian Survey*, Vol 15, No. 8 (August 1975).

101)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5), p. 257~262.

102)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59~65.

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도 가족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반주민들은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는 구호아래 부모들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계승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1974년에 만들어진 「당의 유일사상 확립의 10대원칙」의 제10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제10원칙의 제4항은 “자신 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당은 일반주민들에게 부모가 농업에 종사했으면 자식도 농업을 이어받고, 부모가 공장 노동자였으면 자식도 노동자로서, 그리고 부모가 군수산업에 종사했으면 자식도 군수산업에서 일함으로써 국가에 충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는 부모의 직업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일한 바로 그 농장과 직장에서 자식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충실성의 표본으로 삼고 장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당과 국가기관의 간부가 되면 북한사회에서 상류계층으로 진입하게 된다. 가족적 배경은 특히 지배계급을 재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장치로 작용한다. 상류층의 성원으로서 행정적 관리자가 되면 자원의 행정적 배분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경제·정치·문화적 자원을 손쉽게 배분 받게 된다. 요컨대 출신배경의 분별기준이 되는 순위은 단위로서의 가족은 북한의 불평등구조를 재생산하는 메카니즘의 골간을 이루며 불평등구조를 지속시킨다.

2. 불평등에 대한 북한 지배계층의 정당화

북한의 용어사전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¹⁰³⁾ 즉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것이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한다.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는 지주, 자본가 등 소수의 특권계급이 근로대중을 억압하며 착취하는 사회”라고 규정¹⁰⁴⁾하며 평등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비시킨다. 북한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주, 자본가 등 소수의 특권계급이 노동자, 농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도로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주의 사회를 계급적 착취가 사라진 평등사회로 규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불평등조약’, ‘민족적 불평등’과 같이 국가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며 사회주의 사회내의 계급관계나 구성원들의 차별적 지위에 대해서는 불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혁명을 이룩했기 때문에 계급 혹은 구성원간에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회, 즉 북한사회의 특성은 “사회주의 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 착취를 영원히 청산”했으며 “북한 사회에 사는 모든 인민들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주장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5장 65조에서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이와

10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 p. 286.

104) 위의 책, p. 361.

같은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은 논지에 입각하여 당, 정권, 헌법 등 북한의 모든 권력기관에서의 대민평등론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다시 말해 이러한 평등이론이 선언적으로 주장될 뿐 아니라 당사업, 행정경제사업, 과학,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같은 평등론이 주장되며, 이를 하나의 사회적 원칙과 기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정권 수립 초기에는 이러한 평등론이 지금보다 훨씬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해방후 1946년 3월 5일 토지법 발표,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 법령 발표 등 소위 제반 민주개혁을 통해 일제치하의 낡은 관습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토지개혁으로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 소작농, 고농 등 빈농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했으며,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권익에서 남성들과 동일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시각도 이때부터 생겨났다.

한국전쟁 이후 소상공 생산양식의 개인농업을 협동적 경리로 전환 시킴으로써 계급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업협동화를 전면적으로 단행하였다. 특히 농업의 기계화와 농업노동생산성을 도모하여 농민의 노동계급화의 기초를 다지고자 시도하였다. 농업협동화가 마무리된 1958년 8월까지 북한은 사회주의적 계급구조로 변혁시키는 혁명을 추진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통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전개하고 있다.¹⁰⁵⁾

그러나 북한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농업과 공업간의 격차, 그리고 공업부문내의 차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과도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인정한다.¹⁰⁶⁾ 도시에 비해 농촌은 사상, 기술, 문화 분

105) 강정구, “북한 사회 구조의 변혁,”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62~71.

106) 북한은 사회의 물질적 부의 생산에서 독자적 지위를 차지하는나 그렇지 못

야에서 낙후되고 이로 인해 소유관계와 경제관리 수준이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즉 농촌은 물질기술적 측면에서 도시주민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수준 및 사상의식 수준에서도 낮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노동계급이 추구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¹⁰⁷⁾

또한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계급적 차이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면 없어지지만 현재와 같은 과도기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두 계급 사이에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¹⁰⁸⁾ 김일성도 사회주의 사회의 계급간의 격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농촌정리는 공업에 비하여 물질기술적 토대가 약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은 도시주민들의 문화수준보다 낮으며 농민들은 노동자들보다 사상의식에서 뒤떨어져 있다. 또한 도시에 비한 농촌의 이러한 낙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정리에서는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도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¹⁰⁹⁾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도기에는 계급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급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3대혁명」을 통해 “온 사회의 노동계급화”를 완수하여 사

하느냐에 따라 계급과 계층을 구분한다. 즉 독자적 지위를 차지하는 집단은 계급이라 부르고 독자적 지위를 형성하지 못하는 집단은 계층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계층은 인텔리 및 룬펜프롤레타리아트 등으로 통상 중간층이라고 부른다.

10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 p. 170.

108)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79.

109) 「김일성저작집」 제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99.

회주의 평등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해 온 사회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생산력을 증대함으로써 평등사회로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¹¹⁰⁾ 북한이 주장하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구성원들의 노동계급화를 달성하는데 서로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계급간 차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수적인 혁명과업이다. 노동계급화를 통한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과 문화혁명도 중요하지만 기술혁명이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줄이며 여성들을 가사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계급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과도기에는 “능력에 따라 일하며 일한만큼 분배받는 것”을 사회주의 분배원칙으로 설정함으로써 계급간 및 계급내의 격차를 합리화한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달성하려는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의 복잡성의 정도나 효율성, 그리고 성취된 과업의 양이나 질 등과 같은 기준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분배원칙은 생산력 발전수준이 아직 수요에 따라 분배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의 본질적인 차이가 남아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사회생활을 규정하는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한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 p. 280.

사회주의 분배원칙이란 것은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분배하여 주는 것입니다. 많이 일하여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은 몫을 분배하여 주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은 몫을 분배하여 주는 것이 사회주의 분배원칙입니다.¹¹¹⁾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노동정량을 바로 정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보수를 받을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당적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은 일하지 않고 분배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것이 사회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한다.¹¹²⁾ 당원들이나 또는 당원자격을 거쳐 간부가 되는 경우 간부는 일반노동자와 농민과는 다른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더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과정을 지나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되면 인간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된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사회적 불평등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고르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계급간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있다. 김일성은 북한이 목표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의 이상에 대해 “우리의 리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먹고 잘입고 오래 살 수 있는 사회, 한 사람도 뒤떨어진 사람, 열성이 적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진보적이며 다같이 몸바쳐 일하는 사회, 한 개의 큰 가정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사는 단합된 사회

11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68.

112) 위의 책, p. 68.

를 건설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한다.¹¹³⁾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적 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이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도 없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사회라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고 중산층, 특히 농민대중이 우리를 적극 지지하게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민들이 로동계급화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우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고한 것으로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동요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¹¹⁴⁾

그러나 북한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무계급 사회에서도 계급내 구성원 개개인간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즉 분배에 있어서 완전한 평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분배나 평가에 있어서 노력의 양과 질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북한은 ‘평균주의’라고 부르며 이는 무원칙한 주장으로 비판된다. 이러한 ‘평균주의’를 없애기 위해 노동정량을 바로 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따른 분배를 정확히 실시하도록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⁵⁾

근로자들 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제도를 사회주의로 개조해야 할 뿐아니라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통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급화’를 통해 계급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3대혁명을 계속해

113) 김일성,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김일성저작집」 제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328~329.

114)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67.

115) 과학·력사사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1982), p. 469.

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대계급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여 고립·진압하고 노동자·농민·인테리에 대해서는 사상·기술·문화 혁명을 통해 노동계급화를 완수함으로써 계급적 차이를 줄인다는 것이다.¹¹⁶⁾ 농민계급을 노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의식화교육은 물론 농업의 기계화를 통해 계급으로서의 농민을 없애고 노동계급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테리와 사무원 등 중산층에 대해서는 육체노동을 통해 노동계급의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조직생활을 통해 혁명정신을 고취한다는 전략이다.¹¹⁷⁾

북한은 또한 ‘은 사회의 인테리화’ 정책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을 대학졸업 이상의 문화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낡은 사회가 남겨 놓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년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 각종 전문대학을 창설하여 근로자들도 교육과 지식수준에서 사무직 정신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평등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상승이동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사회이동이 개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은 일찍부터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이 훌륭하면 간부로 등용된다는 점을 내세워 개방적 사회구조와 사회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합리화하였다. 1986년 5월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주년 기념강의에서 김일성은 간부의 조건으로서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높은 실무능력, 고상한 인민적 품성” 등이라고

116)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김일성저작집」 제22권, pp. 447~448.

117)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 pp. 273~276.

강조하였다.¹¹⁸⁾ 김정일도 당권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부동용의 핵심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¹¹⁹⁾ 김일성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여기에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체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상향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이 1974년에 선언한 김일성 사상의 ‘김일성주의화’와 그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바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간부의 최고 덕목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이동의 개방성에 대해 북한은 각종 학습체널을 통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¹²⁰⁾

북한사회에서 출신성분에 의한 폐쇄적 계층구조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간접적인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는데 1970년대까지 빈번했던 성분에 관한 언급이 80년대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70년에 출판된 「김일성동지의 로작색인」은 성분에 대해 매우 상세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82년 출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은 성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적어도 성분에 의한 차별이 과거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급간의 격차나 사회적 이동의 개방성에 대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현실적 불가능성을 감지하면서도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다. 물론 당강령과 헌법상에는 누구

118)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김일성 저작집」 제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34.

119)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중앙 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4.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권 (1987), p. 96.

120)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26-55.

에게나 권리가 주어진다고 되어있지만 간부로의 상향이동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조직의 일방적 판단으로 선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노동자와 농민 등 일반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누구나 간부로 출세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가 시도된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도입되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져 사회주의적 평등성이 약화되는데, 중국의 경우 이러한 불평등의 발생을 ‘선부론(先富論)’이라는 개념으로 합리화하였다. 즉 불평등의 발생이 반드시 빈곤층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전체 인민의 복지와 국가 경제의 향상을 견인하는 ‘자격있는 부유계급’의 성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등소평은 1978년에 이미 일부 지역과 계층이 먼저 높은 소득을 올리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지역간 빈부격차가 정치문제화되었을 때에도 ‘남순강화(南巡講話)’에서 먼저 발전한 지역은 발전하지 못한 지역을 이끌어 궁극적으로 함께 부유해진다는 사회전체에 대한 선부(先富)의 기여를 강조했다.¹²¹⁾

북한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화의 시도는 아직 전개되지 않고 있다. 대신 계급간, 지역간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고 점점 평등성을 향해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계급·계층간, 지역간에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의 부진으로 인해

121) 鄧小平, 「鄧小平文選 1974-1982」(北京: 人民出版社, 1983), p. 142; 「鄧小平文選 III」(北京: 人民出版社, 1993), p. 374; 장경섭, “중국의 개혁: 편파적 시장화와 계급갈등,”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46에서 재인용.

신흥부유층의 형성과 같은 형태의 불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불평등의 성격은 개혁·개방 및 경제성장의 결과가 가져오는 가시적인 소비패턴의 차이로 생겨나는 위화감이나 갈등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느끼는 불만과 박탈감인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은 베트남과 비슷하게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과 대비시켜 사회적 평등성을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적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V. 불평등 구조의 정치사회적 함의

1. 주관적 불평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

불평등 구조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계급, 출신성분, 성별, 연령 등 각 집단들에서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된다. 이는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특히 상대적 박탈감은 곧 정치사회적 함의를 지니게 되며, 구체적으로 해당 주민의 정치사회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계급, 출신성분, 성별, 연령 집단 내에서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 사회계급별

노동자, 농민, 인테리는 상이한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은 북한 사회주의체제 건설기부터 기본계급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노동자의 위상은 대단히 높아서 줄곧 사회적인 모범계급으로 칭송되어 왔다. 북한에서는 노동자, 농민, 인테리 순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사회인식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이들 계급 사이에 불평등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노동자, 농민 또는 인테리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계급에 비해 더 높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농민, 인테리가 곧 불평등의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계급별로 공유되고 있는 사회

인식의 차이만 언급하기로 한다.

노동자가 우선시되는 경향은 노동계급이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통해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맑스-레닌주의로부터 기인한 것으로서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를 대표하는 정책이 “혁명화, 노동계급화”였다. 특히 이 정책이 인테리에게 적용되면서 계급적 전환이 시도되었다. 이 정책에 의하면, 인테리는 하나의 계급으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집단 또는 계층으로서 혁명화를 통해 노동계급의 의식을 주입받아 노동계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테리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는 인테리가 원래 이중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사회집단이라는 김일성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김일성에 의하면, 인테리 특히 구인테리는 주로 이질적인 소자산계급 출신으로서 일제 하에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위해 일한 동시에 대자본가로부터의 압박 때문에 독립혁명과 공산주의운동에 참여하는 이중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는 착취계급이 아니므로 소멸의 대상은 아니지만, 계급적 전환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¹²²⁾ 인테리에 대한 이같은 정책은 점차 신·구 인테리에게 구분없이 적용되었는 바, 새로 양성된 인테리가 일제의 탄압과 사회주의건설의 경험이 없어 구인테리 못지 않게 계급의식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²³⁾

한편 북한에서 농민은 핵심적 산업기반인 농업 종사자이지만 토지에 대한 낮은 소유욕을 지닌 까닭에 혁명의 교화대상이 되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사상, 기술, 문화에서의 3대혁명과 이를 운동차원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소조운동이 전개되면서 농민에 대한 혁명화가 가속

122) 김일성,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찰할데 대하여” (함경북도 인테리들 앞에서 한 연설, 1968.6.14),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356~371.

123)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7.1), 『김일성저작집』 1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388.

화되었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과도기 단계에서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의 차이를 없애는데 있다고 주장되었던 만큼, 농민의 의식을 계급적으로 고양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노동자, 농민, 인테리에 대한 당국의 정책이 달랐던 것 만큼, 이들 계급의 사회인식 또한 차이가 있다.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선진 계급 의식을 가진 것으로 자부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의사를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원 가입을 통해 간부층으로의 사회적 상승이 보장된 좋은 출신성분의 노동자인 경우, 생산현장에서 다른 사회계급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 노동자의 인테리에 대한 우월감은 대단해서 후자의 입장을 “인테리적 근성” 또는 “인테리적 견지”라고 부정적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반면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 사회적 상승이 보장되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까닭에 인테리에 대한 특별한 편견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노동자는 오히려 인테리에 대해 지적 열등감 또는 질시감을 가질 수 있다. 이들의 사회인식의 특성은 불평등 문제를 정치적 차원보다는 비정치적 차원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농민 또한 사회주의의 과도기에 의식교양을 통한 노동계급화되어야 하는 대상이지만, 기본 생산계급으로서의 인식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체로 지적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제재 또는 중간간부의 잘못으로 이해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인테리는 제한된 사회적 위상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존재양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⁴⁾ 인테리는 내

124) 김성철, 「북한 지식인 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125~127.

면적으로 비판적 의식의 잠재 가능성을 지닐 수 있는 바, 이들은 미래에 대한 이상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대변혁, 북한 경제의 침체, 식량난 등의 열악한 현실과 이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의 심화를 목격하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¹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는 일반 노동자들이 토로할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를 자제하며, 어떤 모임에서든 의견선도자가 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학식 또는 전문적 지식의 소유자인 그들이 과실을 범하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사회적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 출신성분별

북한에서는 출신성분이 가장 중요한 불평등의 준거가 된다. 핵심군중 출신의 기득권층은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계급'(New Class)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떠받들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한다. 따라서 북한 사회의 불평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혹시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혜층으로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핵심군중은 노동당, 행정경제기관, 인민군, 보위부, 안전부 뿐만 아니라 사로청과 같은 근로단체의 고위직을 독점하는 간부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혜자 및 통제자로서 직위와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있다. 자긍심은 직위가 높을수록 크며, 다른 간부들보다 전문 당 간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5) 임진호(연변대 물리학부 부학부장)와의 면담, 1995.5.31.

물론 핵심군중에 속한 간부층 내부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 기회구조와 상대적 박탈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레이몽 부동(Raymond Boudon)에 의하면, 사회적 상승 기회가 적은 집단에서보다도 오히려 기회가 많은 집단 내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¹²⁶⁾ 다시 말해 기회가 많은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만큼 기회에 대한 기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회 포착에 실패한 경우 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특권층에 속한 간부들은 일반주민들 보다도 사회적 상승에 대한 기대와 노력이 높은 만큼 상위 직책으로의 상승에 실패한 경우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수 있다. 반면 일반 주민은 사회적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력도 별로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출신성분별 집단내의 구성원간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출신성분별 집단간에 느끼는 박탈감에 비하면 유동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신성분이 다른 집단들 사이에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며 부동이 말한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한다. 북한 기준에서 볼 때, 출신성분이 하류에 속한 복잡군중 중에서도 적대계층은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체제 저항감이 일정부분 내면화된 상태에서 살아간다. 물론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 때문에 이들 사이에 인식을 공유할 공간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복잡군중, 특히 적대계층의 주관적 인식은 최근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료집단 및 외부세계 접촉에 의해서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6) Raymond Boudon, "The Logic of Relative Frustration," Jon Elster, ed., *Rational Choice* (Oxford: Basil Blackwell, 1986), pp. 171~196.

생존을 위한 식량획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사회적 지위에 따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배분에 큰 차이가 드러나게 되며, 따라서 이것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은 정미소에서 정치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을 확인하는 바, 일반주민과 간부 가족의 정미 분량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주민들은 간부 가족에게 야유를 보내는 형태의 집단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집단행위는 대부분 정치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는다.¹²⁷⁾

하지만 복잡군중 중에서도 적대계층에 속한 주민들은 자신 이외의 외부세계에서 북한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체제 모순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여기에 속한 주민들은 사회적 상승이 철저히 차단됨은 물론 식량난으로 기본적인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세계나 타인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남다르다. 따라서 남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라디오의 채널을 돌리다가 남한의 사회교육방송을 청취하거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와의 일체성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같은 경향은 많은 탈북자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출신성분별 집단 사이에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잠재해 있으며 식량난 심화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들 집단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은 비정치적 차원의 불만표출에 머물러 집단적 체제저항으로 발전되지 않고 있다.

127) 홍금실(전 북한 농장원)과의 면담, 1998.8.19.

다. 연령집단별

북한의 연령집단 사이에는 불평등 인식차나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사상교양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층 사이에 세대차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령집단 그 자체를 불평등의 준거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여기서는 최근 가시화되는 청년층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을 인지하는 시기로서의 청년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사회적 변화 시기에 청년층의 정치사회적 움직임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들에 대한 학문적 분석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에서는 식량난으로 인해 청년층의 유동성이 증가함으로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전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등 조직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용해를 비롯한 상당수의 청년동맹 간부가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건은 현재 북한 사회에서 청년층의 동요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앞서 언급된 식량난민 조사보고서에서도 북한이 못살게 된 이유에 대해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¹²⁸⁾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오랫동안 청년층의 사상적 동요를 우려하여 특히 청년층의 사상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정일은 최근 청년·학생들의 움직임이 북한사회의 통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주의혁명의 성패가 혁명 3, 4세대들이 혁명 1, 2세대들의 업적을 이어받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당파 수령에 대한 절

128)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의 실태」, p. 45.

대적인 충실성을 청년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¹²⁹⁾ 그는 또한 청년들이 불건전하고 퇴폐적인 사상과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청년동맹 등의 사회조직과 학교교육 기관에서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였다. 아울러 그는 청년협주단 경축공연을 관람하거나 김일성대학의 농구경기를 관람하는 등 청년층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들과의 친밀감을 과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청년·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체제가치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비교적 사상무장이 잘되어 있는 편이다. 과거 공산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급진적인 정치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의 이념적 열정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면, 북한 청소년들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 가치나 자유화의 바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집단도 청년·학생일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 청년·학생들에게 자본주의적 놀이문화를 전파시키는 비디오 또는 카세트 테이프 등이 중국교포, 북송교포, 조총련 망북자들을 통해 유입되어 유행되고 있다. 남한 노래가 연변을 통해 북한에 전해져 불리우는 경우도 있는 데, 많은 경우 가사가 바뀌거나 편곡이 되어 북한 청년들은 이들 노래가 남한 노래인 것을 모르고 부르기도 한다.¹³⁰⁾ 하지만 그 내용과 주제가 북한의 것과는 사뭇 다르므로 청년들 사이에서

129)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1995.12.25) 및 “김일성 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어 나가자”(1996.8.24).

130) 서병림(전 북한 노동자)과의 면담, 1996.6.28.

금방 전과된다. 중요한 것은 한번 태동한 일종의 반문화(counterculture)가 쉽게 일소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북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이문화가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¹³¹⁾

북한에서 청년층이 체제의 구조적 불평등에 관해 독자적인 인식을 가진 연령집단은 아니지만, 청년기가 불평등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하다. 이는 소위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청년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청년기에 대학진학 또는 군입대와 관련하여 자신과 형제·자매들에게서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을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이다.

먼저 인민군 입대는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 특히 당원증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탈북자들은 군입대의 중요성을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군입대는 징집제도 아니지만 순수한 의미의 지원제도 아니다. 즉 북한의 청년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 입대 희망자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의 문건에 의해 심사·판정되며 출신성분 때문에 입대가 거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사 입대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호위총국, 전방지역(북한 표현으로는 전연지대), 판문점대표부 등과 같은 주요 지역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요컨대 군입대는 북한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의 디딤돌이지만, 여기서 좌절을 경험하는 젊은이들은 일생을 두고 자신의 무력함과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

대학진학은 간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전반 김정일이 당업무에 깊숙히 개입하게 되면서 전문지식

131)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이현경·이기동,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124~125.

소유자를 등용하는 조건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은 출신성분이 좋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 일류 대학을 졸업해야만 충족될 수 있다. 또한 군입대가 대학 입학의 자격요건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간부의 요건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대학 입학생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첫째는 체대군인 출신으로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둘째는 현장근무 중 발탁되어 입학하는 '현직생'으로서 전체의 40%이고, 셋째로 고등중학교 졸업자 중 우수자인 '직발생'(또는 직통생)으로서 전체의 20%정도이다.¹³²⁾ '현직생'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체대군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군입대가 대학입학의 중요한 자격요건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고등중학교의 우수 졸업자로서 출신성분에 다소 하자가 있어 복잡군중에 속하는 사람(예를 들어, 친척 중 월남자가 있는 경우)도 대학에 진학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청년기에 사회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인식하게 된다. 재학 중 주요한 집회에의 참여를 제한 받거나, 졸업 후 직장배치에 있어서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직종을 받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경우 청년기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

요컨대 북한 당국은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청년·학생이 주요 요소임을 깨닫고 있는 바,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사상교양을 통해 사회주의체제 존속의 보루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청년층은 기성세대와 사회적 경험이 달라 상이한 가치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¹³³⁾ 북한체제의 내부

132) 윤웅(전 북한 대학생)과의 면담, 1996.7.8.

133) 상이한 사회적 경험으로 인한 가치체계의 전승 과정으로서의 정치사회화 또는 정치교육의 의미가 감소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Dawson, Richard E., Kenneth Prewitt and Karen S. Dawson.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Inc., 1977); 정세구 역, 「정치사회화」(서울:

적 변화와 사회주의 대변혁으로 외부사조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져 이들 사이에서 점진적이거나 반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으로 하여금 다소 독자적인 사회인식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조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인식과 관련, 청년기는 자신의 출신성분을 자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복잡군중, 그 중에서도 적대계층에 속한 청년들은 자신의 출신성분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물론 핵심군중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출신에 따른 상반된 인식의 형성은 '계급없는 사회'라는 허위적 구호 아래서 자란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체제가 요구하는 규범과 가치체계로부터 일탈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만든다.

라. 성별

북한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헌법상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지만(1998년 개정헌법 77조), 실제로 남녀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성은 많은 노동량과 불평등을 체험하고 있다.¹³⁴⁾ 특히 노동자 계급, 농촌 및 소도시의 여성은 더욱 그렇다. 생산현장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작업량을 채우지 않은 남성들의 할당량을 메꾸어 주는 사례가 허다하다. 심지어 여성 노동자들은

법문사, 1981)를 참조할 것.

134) 홍금실(전 북한농장원)과의 면담, 1998.8.19; 지만철(전 북한노동자)과의 면담, 1998.8.20; 이유진(전 북한노동자)과의 면담, 1998.8.24.

남성들로부터 폭력을 당해 상해를 입는 사례까지 있다. 한편 가정에서 여성들은 무거운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가정에서 대체로 남녀의 역할분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들은 소위 '대남자주의'라는 구호아래 남녀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녀 불평등은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더욱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극명한 예로 어린이 다음으로 여성들이 기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가 영양실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한편 여성이 그 다음 순위의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부양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은 가족에게 음식을 양보해야 한다. 때로는 가족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생존을 위해 매춘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¹³⁵⁾

여성들도 이같은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높은 수준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들 입장에서 남성 대 여성의 상대결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녀불평등이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진 적도 없으며, 다른 종류의 불평등에 가리워져 큰 문제로 인정되지도 않고 있다.

2. 정치사회적 함의

북한에서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과연 정치적 행동으로 표출될 것인가? 적대계층은 극심한 불평등을 감내만

135) 홍금실(전 북한 농장원)과의 면담, 1998.8.19; 최만수(전 북한 노동자)와의 면담, 1998.8.24.

할 것인가. 아니면 봉기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관련하여 이같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불평등에 처한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이 맑스가 말하는 운동성을 지닌 계급의식으로 응집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불평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표출, 해소, 재제되는 양식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정치적 행동으로의 발전 부진

고전적 맑스주의에 의하면,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가 심해짐에 따라 노동자들은 혁명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모순과 계급적 착취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공통된 저항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이들의 혁명 목표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는 국가를 전복시킨 후 자본주의적 잔재를 소멸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혁명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과 혁명의 원동력으로서의 계급의식이다.

집단별 불평등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북한에서 아직은 고전적 의미의 정치의식을 지닌 계급집단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신성분에 따른 불평등이 심각하고 낮은 출신성분의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은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조직적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사회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일정한 집단적 저항행동을 하기에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철저한 사회통제는 주민들간 불평등에 대한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북한에는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 등 경찰 및 비밀경찰 역할을 행하는 공안

기구가 항상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북한의 통제 실패는 “세 명 이상 술도 못 마신다” 또는 “내 등도 남이다” 등의 불만 섞인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¹³⁶⁾ 통제를 체제유지의 최후 보루로 판단하고 있는 당국은 주민들간 상호감시 통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4년 “당내 기본 부서로서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보위부가 있다”¹³⁷⁾라는 김정일의 언급이 보여주듯이, 최근 북한은 반체제행위자 색출을 주임무로 하는 보위부의 역할과 위상을 중시하고 있다.

사회적 이완현상들이 증가할수록 당국의 통제는 더 강화되기 마련이다. 북한은 공안기구 중심의 통제를 확대하여 당원들에게도 주민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로 협동농장에서 당원에 의한 주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 1개 협동농장에는 보위원 1명, 안전원 1명이 배치되는 것이 상례인데, 이들이 4백~5백명(부양가족 포함 1천명 내외)의 농장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대부분이 당원인 제대군인들을 ‘무리배치’(집단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주민통제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¹³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출신성분이 낮은 주민들은 간부들에 대해 높은 적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바로 출신성분 때문에 다른 주민들 사이에서는 용인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가혹한 처벌을 받는 까닭에 행동공간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안기구에 의한 공개처형은 그들의 불평등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136) 이해영(전 북한 노동자)과의 면담, 1996.6.28.

137) 차성근(전 북한 대남공작원)과의 면담, 1996.6.3.

138) 최동철(전 북한 농민)과의 면담, 1996.7.1.

<표 9> 못살게 된 이유(복수응답)

못살게 된 이유	응답수	응답빈도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198	23.3%
국가정책 때문	131	15.4%
군사비의 과다지출 때문	101	11.9%
지도층의 관료주의적 실정 때문	91	10.7%
지도자의 책임	87	10.2%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80	9.4%
경제개발을 하지 않아서	25	2.9%
통일이 되지 않아서	22	2.6%
기 타	116	13.5%
합 계	851	100.0%

자료: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의 실태」(1998.5), p. 20.

둘째,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차단과 사회주의체제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주민들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줄여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불평등에 따른 주민들의 저항을 가로막고 있다. 북한 당국의 선전이 정치적 저항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식량난이 악화되기 이전까지 김정일에 대해서 대략 40~70%의 주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³⁹⁾ 식량난으로 인해 김정일에 대한 지지가 주민들 특히 복잡군중 중에서 감소하고 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량 난민과의 면담보고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못살게 된 이유를 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자연재해(23.3%), 비효율적인 국가정책(15.4%), 과다

139)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87~95.

한 군사비지출(11.9%) 등에서 찾고 있으며,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0.2%로 높은 편이 아니다. 이는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배층이 제시하는 체제 정당화의 논리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995년 7~8월에 발생한 수해피해를 이례적으로 심각하게 보도함으로써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정당화하였다. 당국은 홍수피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까지 수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식량난이 자연재해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주민들은 식량부족을 겪으면서도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 때보다는 낫다는 비교우위의 사고로 만족하는 경향조차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며 군사적 긴장감이 해소되어 군사비 지출을 줄이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력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는 분단구조 속에서 남한과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론적 수정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경제적 효율성에서 찾는 데서 후퇴하여 도덕적 우월성으로 연결시키면서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북한체제가 훨씬 잘먹고 잘산다는 경제적 우월성을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점차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이 붕괴함에 따라 북한은 경제적 우위 대신, 무상교육·무상치료 등 사회주의 복지제도에 대한 선전과 자본

주의의 실업·도덕적 타락 등 자본주의 사회문제의 지적을 통해 체제 정당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¹⁴⁰⁾ 이같은 선전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람들 가운데 남한이 북한보다 잘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한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 당국의 체제 우월성 선전이 사회통합과 불평등 정당화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나. 개혁·개방 확대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식 변화 가능성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위기가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혁명이나 정권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¹⁴¹⁾ 부르봉 왕조나 로마노프왕조, 고르바초프정권은 체제가 붕괴하기전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재정난과 경제난을 겪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국가재정의 곤란과 경제난은 곧바로 혁명적 위기를 초래한 결정적인 단서는 되지 못한다. 골드스톤(Goldstone)은 이러한 경제난이 적어도 다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혁명과 같은 폭발적인 위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엘리트의 소외와 갈등이 심화되고 일반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

140) 이러한 정당화의 시도는 1990년대에 들어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의 9기 시정연설에서 김일성은 북한이 현재 “유족한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기본생활은 보장받고 있다”라며 경제효율성보다는 사회적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1990.5.24)”；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1992.1.3).”

141) Nicholas Eberstadt, “Is Contemporary North Korea A ‘Pre-revolutionary polity’?: Clues and Hints From History and ‘Social Science Theory,’” (미출판 논문), p. 8.

이다.¹⁴²⁾ 북한에서는 엘리트의 소외나 기존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동원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개방정책이 북한사회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북한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내각중심의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헌법은 소유주체의 범위를 협동단체에서 사회협동단체로 늘리고 개인소유의 범위도 터밭 이외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가·가격·수입성의 공간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시장경제적 요소도 도입하였으며, 나진·선봉지역 등 경제특구에서의 사적 경제활동이 장려되었다.

이에 앞서 북한은 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소위 '강성대국'론을 피력하고 경제건설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로동신문은 김정일이 생각하는 강성대국론에 대해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 건설방식이다"¹⁴³⁾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사상과 군사 강국 건설에 주력해 왔다고 본다면 이제는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북한의 불평등 구조

142) Jack A. Goldstone, ed., *Revolutions: Theoretical, Comparative and Historical Studies* (San Diego, CA: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6); Jack A. Goldstone, Ted Robert Gurr, and Farrokh Moshiri, eds., *Revolutions of the Late Twentieth Century* (Boulder, CO: Westview, 1991).

143) 「로동신문」, 1998. 8. 22.

와 주민들의 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불평등 구조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출신성분에 따른 정치사회적 특권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초보적 수준이 나마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으로 경제관련 간부 및 노동자들의 행동 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치사회적 권력의 소유 여부가 물질적 및 비물질적 재화를 획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으로써 거의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이 가시화되면, 출신성분과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권력만이 불평등 구조의 독립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권력 또한 불평등의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는 바, 행정·경제 부문 간부, 공장·기업소의 지배인, 기술전문직 노동자 등이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권력의 소유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군중 출신이 간부층을 이루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도적 임무를 맡겠지만, 핵심군중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경제업무에만 종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많은 핵심군중 출신들이 비경제 관련 권력기관에서 체제옹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들의 경제적 역할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전부 요원들은 경제 주체들의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획득하는 개혁·개방의 기생조직이 될 것이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위상은 부차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출신성분에 의해 특권을 누렸던 계층은 경제부문으로의 직업적 전환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정책변화는 불평등의 생산주체 및 구조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바, 우리는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를 단순히 경제적 규모

의 확대란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변화란 측면에서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주·여행의 자유 허용으로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이 증대될 것은 분명하다. 지역간 주민유동성이 증가하면 북한주민의 사상적 응집력의 근간이 되고 있는 조직생활과 학습생활이 어렵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이 증대되면서 최근 수년동안 이미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상당수 발생하였다. 지역간 이동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면 학습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집단별, 조직별 학습생활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사상의식의 해이 및 비판적 정치사회적의식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내부의 변화 뿐만 아니라 나진·선봉경제특구 등 개방지역에서의 변화가 북한의 불평등구조와 주민들의 정치사회적 의식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한다. 나진·선봉지역에서는 국가계획체제와 독립적으로 기업관리가 시행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봉사매대’라는 개인상점이 들어서고, 가판대도 200여곳 설치되었으며, 공동시장에서 물물교환을 실시하는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간부는 물론 일반주민들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싹트고 있다. 물론 반체제적이지는 않지만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일정 정도 표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중국인과의 접촉도 자유롭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활과 장사에서 자유를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활동 등으로 남한주민과의 접촉범위가 넓어 남한과의 비교의식에서도 빠른 변화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의 정치사회적 의식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내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나진·선봉지

역의 개방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사조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내부로의 파급효과는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다. 나진·선봉지역의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은 자력갱생을 근간으로 하는 북한내부의 체제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비판의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구지역의 경제적 성공이 자유주의적 사고와 불평등 의식을 만들어 내는 매개자적 기능을 수행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나진·선봉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개방정책은 북한사회의 불평등 인식과 체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정치사회적 태도의 세가지 유형

북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계급의식과 같은 응집된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등 구조와 관련한 북한 주민의 정치사회적 태도에 대한 우리의 의문이 끝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 또는 자제되거나 그 반대로 누적되기도 한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에서 불평등을 인식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은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의 탈퇴, 충성, 표출 등과 비슷한 세 가지 유형의 정치사회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¹⁴⁴⁾ 첫째, 외면적으로는 충성(loyalty)을 과시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우회적·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북한에서는 대체로 청년기에 자신의 출신성분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게 되고 사

144)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회활동을 통해 자신이 겪는 불평등이 구조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미래에 대해 번민하게 된다. 많은 경우 출신성분이 낮은 복잡군중 출신 주민들이 그렇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노동당 입당을 통한 사회적 지위의 획득을 통해 보장받으려 하기보다는, 이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생존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 출신 인텔리들은 식량난이 심화되자 교원 직책을 버리고 외화벌이 사업소에 배치받아 생존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있다. 요컨대 이들은 구조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대해 저항하거나 분노를 쌓아가기 보다는, 사회적 상승이 아닌 경제적 이익 추구를 통해 물질적 및 심리적 보상을 추구해 나간다.

둘째, 개인 또는 집단행위를 통해 불만을 표출(voice)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표출방식은 '직접적'이지만 내용은 '비정치적'이라는 점이다. 북한에서 정당한 사안의 경우에는 불만 표출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있다 하더라도 관대하지만, 김정일이나 당의 정책에 대한 불만표출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만표출은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된 것만은 아니며, 간부와 비간부 사이에서 일상생활 전반과 관련하여 다반사로 일어난다. 대개 상급자에 대한 불만표출은 업무추진상의 갈등, 상급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비판, 작업배정의 부당성, 가족의 관혼상제 참석, 질병치료, 임금체불, 식량배급중단 등과 같은 비정치적 문제들이다.¹⁴⁵⁾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불만표출은 꼭 이같은 문제들에 한정되기보다는 간부 중심의 사회구조에 대한 평소의 불만과 불평등인식 및 상대적 박탈감에서

145) 안영길(전 인민군 군관)과의 면담, 1996.6.20; 김광일(전 북한 인텔리)과의 면담, 1996.7.9; 오명선(전 북한 노동자)과의 면담, 1996.7.3; 서병림(전 북한 노동자)과의 면담, 1996.6.28; 최주환(전 인민군 군관)과의 면담, 1996.5.20; 이순옥(전 북한 농민)과의 면담, 1996.7.12.

촉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복잡군중 출신 또는 일부 기본군중 출신 주민들은 김일성 사망 후 배급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당 간부, 안전원, 보위원 등이 특혜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불만표출은 형식에 있어서 비정치적인 방식을 택하지만, 그 근원은 체제의 모순성과 불평등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⁴⁶⁾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식 수준이 높은 인테리 계층은 비정치적 불만표출마저 자제하는 반면 학력이 낮아 사회적 영향력이 약한 농민과 노동자, 그 중에서도 여성층은 더 빈번하게 불만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불만을 누적시켜 나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체제에 저항하거나 탈출(exit)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앞의 두 가지 유형에 비해 체제존속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태도로서, 일상 생활에서는 철저한 자제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위장하기도 한다. 이같은 태도는 흔히 북한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존해나가는 월남자 가족, 교도소 출소자, 혁명화 경험자로서 노동강도가 높은 직업을 가진 적대계층의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일상생활에서의 간혹 불만표출을 통해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나가는 일반 주민과는 달리, 이들 적대계층 출신들은 불만표출을 대체로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의 불만표출은 출신성분으로 인해 체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엄한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체로 남한의 사회교육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등 외부 세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46) 김문관(전 북한 노동자)과의 면담, 1998.9.10.

많은 경우 이들 적대계층 출신들은 이판사판식 전쟁을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전쟁을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생존의 문제가 오히려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들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류에 속한 일부 탈북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동안의 설움을 당간부, 안전원, 보위원 등 정치사회적 특권층에게 발로하거나 또는 파괴적 행위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소외계층은 북한 체제위기시 가장 잠재적인 정치사회적 저항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북한사회는 공식적으로 맑스-레닌주의 계급노선에 의한 계급적 평등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한국전쟁을 통한 심대한 사회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전쟁에의 참여 및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성분을 분류하고 이를 차별화한 엄격한 정치적 위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직된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광폭정치’ 등의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사회저변에서의 불평등 해소 및 주민들의 불평등 인식을 변화시키는데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듯 보인다.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한 계급정책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 사회집단으로서의 노동자의 지위는 높아졌고 계급간 소득격차가 감소되었으며 성별차이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위계구조가 경직화됨에 따라 부의 통제에 대한 불평등과 분배적 측면에서 소득과 지위의 불평등으로 연결되었다. 불평등 구조는 배급과 사회문화 서비스 등 정치적 위계구조에 따른 차별적 대우 및 경제난 악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증가 등을 통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3~4년 동안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어린이와 여성의 피해가 늘어나고 지역간 식량공급의 편차가 나타나는 등 연령별, 성별, 지역별 불평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절대 소득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계급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불평등의 구조속에서 사회적 상승이동이 가능한 주요 통로는 교육과 당이다. 정부기관 및 당 등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는 현 북한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입당하는 것은 간부, 전문인 등 상류층으로 진출하는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교육의 기회와 입당자격이 가족배경과 출신환경에 의해 제약받음으로

써 불평등 구조는 재생산된다. 사회적 분업체계의 성격을 띤 북한의 불평등 구조는 오히려 교육제도와 당체제에 의해 제약되며 가족구조에 의해 영속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엄청난 피해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전쟁의 사회적 결과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지도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도기에는 도시와 농촌, 공업부문내 및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통해 계급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북한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실천하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면 사회적 상승이동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정당화 논리 전개와 설득을 통해 북한지도부는 주민들의 비판적인 정치사회적 태도형성을 억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구조가 북한주민들의 정치사회적 인식 및 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자, 농민, 인테리 계급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규정하는 계급적 지위와 위상 때문에 사회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을 차별화할 수 있는 준거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반면 출신성분 등 정치적 위계구조하에서 가장 열등한 복잡군중과 최상층인 핵심군중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잡군중은 오랜 사회적 차별관행의 피해자로서 박탈감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식량난의 악화로 복잡군중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핵심군중도 특수계층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으나 지위상승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한다. 또한 여성과 청년층은 불평등 구조를 자각해 가고 있거나 처음으로 심각한 불평등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다.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북한에서 아직은 정치의식을 지닌 계급집단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 계급의식을 지닌 집단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적 측면에서 북한당국의 사회통제와 긍정적 측면에서 각종 학습채널을 통한 체제평등성에 대한 합리화와 선전사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넓게 보면 한국전쟁의 역사적 경험과 분단구조라는 사회상황으로 인해 비판적 정치의식이 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외부의 정보통제와 체제분단의 갈등·위기구조를 활용하여 동요계층들의 정치사회적 비판의식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량난으로 다양한 사회적 분화와 불평등의 악화를 경험하면서도 분단과 전쟁이라는 역사·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식량난과 사회분화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비판의식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상황 변화와 분단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정치사회적 비판의식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사상학습이나 사회통제만으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정치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식량난의 원인을 국가정책 때문이라든가, 지도층의 관료주의적 실정 때문으로 생각하는 동요계층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정치사회적 비판의식을 억제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한은 3년여 동안 추진했던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1998년부터는 '강성대국' 건설을 향한 '사회주의 강행군'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헌법을 개정하여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경제문제에 관한 한 내각에 책

임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지방산업이 활성화되고 취약계층이 기아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주의적 배급체계의 회복과 같은 근본적인 생활조건의 향상과 정치적 억압상황의 개선은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잠재되었던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현재화될 수도 있다.

불평등 구조의 심화는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부터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는 이미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정권당국은 이러한 불평등 현상을 합리화하는 이론적 시도로서 ‘선부론’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북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평등성 유지를 체제의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당분간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가 정치사회적 비판의식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혁·개방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결과가 불가피하게 초래될 것이다.

북한이 국내의 경제활동 공간에서 소유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기 단계의 시장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변화가 불평등 구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될 것인지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개방정책으로 부를 창출하는 집단이 증가함과 동시에 개방지역과 북한내부의 비교 개념이 확산되어 불평등 인식과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시기에 청년층의 정치사회적 움직임과 상대적 박탈감을 누적시켜온 소외계층의 태도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개혁·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이미 사상적 동요가 적지 않은 청년층과 소외된 적대계층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세력을 형성하며 정치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선봉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
구소, 198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7.
- 에드워드 G. 그랩, 양춘 역. 「사회불평등: 이론과 전망」. 서울: 나남출
판, 1994.
-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_____. 「북한 지식인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
지 완성하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김채운·장경섭.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서울: 서울대학교출
판부, 1997.
- 노용환·연하청. 「북한 인구센서스의 정책적 함의: 인구구조와 특성」.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1997.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주민의 가치체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북한연구소. 「북한사회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 서재진. 「북한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5.
- 송복 편저. 「사회불평등갈등론」. 서울: 전예원, 1986.
- 니콜라스 애버스타트 저, 송명갑 역.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 유완식·김태서. 「북한30년사」. 서울: 현대경제일보사, 1975.
- 이금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이교덕.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은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 _____.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최수영.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서울: 통계청, 1997.
- 통일원. 「남북한 사회지표」. 서울: 통일원, 1991.
- _____. 「남북한 경제지표」. 서울: 통일원, 1995.
- _____. 「'95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5.

- 통일원. 「북한 경제 통계집」. 서울: 통일원, 1996.
- 프랭크 파킨, 길태근·김원동 역. 「계급불평등과 정치질서」. 서울: 나남출판, 1988.
- Bahry, Donna L. and Joel C. Moses. eds. *Political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 in Communist System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0.
- Davis, Howard and Richard Scase, *Western Capitalism and State Socialism: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Ltd., 1985.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구 자본주의와 국가 사회주의」. 서울: 느티나무, 1991.
- Dawson, Richard E., Kenneth Prewitt and Karen S. Dawson.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Inc., 1977. 정세구 역. 「정치사회화」. 서울: 법문사, 1981.
-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2.
- Eberstadt,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 Washington, D.C.: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 Giddens, Anthony.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Vol. 2,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Goldstone, Jack. A., ed. *Revolutions: Theoretical, Comparative and Historical Studies*. San Diego, CA: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6.

- Goldstone, Jack. A., Ted Robert Gurr, and Farrokh Moshiri, eds. *Revolutions of the Late Twentieth Centur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1.
- Halliday, Jon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 Hirschman, Albert O.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Horowitz, Irving. *Foundations of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 Inkeles, Alex. *Social Change in Soviet Russi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1.
- Kende, Pierre and Zdenek Strmiska, translated by Françoise Fead. *Equality and Inequality in Eastern Europe*. New York: Berg Publishers, Ltd., 1987.
- Kihl, Young Whan.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 Kim, Byoung-Lo Philo. *Two Koreas in Development*.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2.
- Lane, Daavid. *The End of Social Inequality?: Class, States and Power under State Social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 Matthews, Mervyn. *Poverty in the Soviet Union: The life-styles of the underprivileged in recent ye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Ok, Tae Hwan and Hong Yung Lee, eds. *Prospects for Change in North Korea*. Berkeley, C.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Berkeley)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Seoul).
- Parkin, Frank.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Social Stratification in Capitalist and Communist Societies*. London: Praeger Publishers, 1975. 길태근·김원동 공역. 「계급불평등과 정치질서」. 서울: 나남출판, 1988.
- Przeworski, Adam. *Democracy and the Marke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 논 문

- 강정구. “북한 사회 구조의 변혁.”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62~71.
- 강정인. “북한사회의 평등성: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 전망과 관련하여” 『동아연구』 제24집 (1992.6).
- 길태근. “북한의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구조에 대한 이론적 모델 구성,” 『북한연구』 제5권 제2호(1994년 여름).
- 김귀옥·김채운. “변혁기 북한의 계급과 계급정책,” 김채운·장경섭,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김두섭.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사회계층구조의 변화.”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김문조·조대엽. “북한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아세아연구』 제35권 제1호.

- 김병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통합적 성격에 관한 분석.” 『일
죽 김광수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1993).
- _____. “남북한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비교.”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서울: 한울, 1994.
- _____. “북한의 자발적 사회통합 구조와 위기관리 메카니즘.” 『통일
문제연구』 제9권 1호 (1997년 상반기).
- _____. “통일 이후 베트남의 사회적 갈등과 통합.” 『통일된 베트남을
가다』. 서울: 남북나눔운동, 1997.
- _____. “북한의 식량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1998년 상반기).
- 김승철. “북한주민의 노동의식에 관한 연구.” 『통일경제』 (1998.7).
- 김영수. “북한의 인테리 개념과 인테리정책.” 『북한연구』 (1994년 여
름호).
- 김용기.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염홍철 외, 『북한사회의 구
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출판부, 1987.
-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 독
재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83.
- _____. “혁명가유자녀들을 직업적 혁명가로 키우자.” 『김일성저작집』
제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우리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 『김일성저
작집』 제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조선로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김일성저작집』 제40권. 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도홍렬. “김정일 시대의 사회정책 전망.” 『북한』 (1994년 9월호).
- _____. “북한주민의 통제정책.” 『북한사회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 박길성. “북한사회와 농민.” 『북한연구』 (1992년 여름호).
- 북한연구소. “북한의 계급정책.” 양호민 회. 『북한사회의 재인식 1』.
서울: 한울, 1987.
- 안병영.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평등’문제.” 『연세행정논총』(연세
대학교 행정대학원) 제 9집, 1982.
- 안해균. “북한의 직업구조와 노동강화정책,” 『북한사회론』. 서울: 북
한연구소, 1977.
- 오병훈.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개인, 사회구조, 국가의 윤리: 북
한 경제체제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95 북한 및 통일연
구 논문집(제2권)』. 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5.
- 이규영. “동구의 정치개혁: 동유럽 민주화와 선거.” 충북대 국제관계
연구소 별책 제10집, 1997.
- 장경섭. “중국의 개혁: 편파적 시장화와 계급갈등.”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전광희. “한국전쟁과 남북한 인구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
쟁과 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 조한범. “러시아 사회의 계급구조와 부유층의 형성,” 김채운·장경섭,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최용학. “조선 주민의 생활실상과 대외개방전망.” 명지대학교 북한연
구센터 창립학술대회 발표논문 (1995. 5. 2).
-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북한조사연구』 제1
권 1호(1997).
- Boudon, Raymond. “Logic of Relative Deprivation.” Jon Elster, ed.,
Rational Choice. Oxford: Basil Blackwell, 1986, Chapter. 7.
- Eberstadt, Nicholas. “Is Contemporary North Korea a

'Pre-revolutionary Polity'?: Clues and Hints from History and 'Social Science Theory'.

- Evans, Jr., Alfred B. "Economic Reward and Inequality in the 1986 Program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Donna L. Bahry and Joel C. Moses. eds. *Political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 in Communist System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0.
- Kim, B.L. Philo, "Crisis Management of Social Integration in North Korea." Presented at 1996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November 15~17, 1996, Washington, D.C., USA.
- Kringen, John A. "An Exploration of the 'Red-Expert' Issue in China through Content Analysis." *Asian Survey*, Vol 15, No. 8 (August 1975).
- Lenski, Gerhard. "Marxist Experiment in Destratification: An Appraisal." *Social Forces*, Vol. 57 (Dec. 1978).
- Scott, John Finley. "Ascription and Mobility." in Gerald W. Thielbar and Saul D. Feldman. eds., *Issues in Social Inequality*. Boston: Little, Brown, 1972.
- Welsh, William A. "Comparative Political Leadership in Communist Systems." in Carl Beck, et al.,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David Mckay Co., 1973.

3. 기 타

과학·역사사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 평양: 과학·역사사전출판사, 198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1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_____. 「조선말 대사전」 제1권 및 제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의 식량난 실태」. 북한 식량난 민 770명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1998.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7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3.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336호 (1997.6.21~27).

현성일. “북한 인사제도 연구” (미발표 논문).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의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항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共著 6,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 외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계성호 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559, FAX: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FAX: 901-2547)
-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